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555-01



Universal



Periodic

Peer Review



Sourcebook



##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



# 발간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권고사항 이행과정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국가의 UPR 권고사항 이행의무를 지원하고자 UPR 이행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유엔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는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출범하면서 새로이 설치된 인권메커니즘으로, 인권이사회가 모든 국가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공동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료집은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 후보국으로 등록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자발적 공약사항, 제1기 UPR 권고사항 및 정부입장, 제1기 UPR 권고사항 정부이행상황을 점검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제2기 UPR 권고내용 및 정부입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본 자료집에 수록된 대한민국 자발적 공약사항 들은 우리나라가 2013년 인권이사회 후보국으로 등록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관계자와 이해당사자들이 UPR 권고 이행 등의 업무추진에 유의하며 숙지하여야 할 사항 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기 UPR 권고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특히 NGO와 긴밀히 협력해나가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가교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집이 법률제정 및 정책입안 관계자, NGO, 언론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UPR 권고이행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제2기 UPR 권고이행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 1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 CONTENTS

## UPR 이해

I. UPR 개요 .....	3
II. UPR 업무 절차 .....	7

대한민국 인권이사회 입후보 자발적 공약, 2013-2015 .....	11
--	----

The candida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Human Rights Council, Voluntary Pledges and Commitments 2013-2015 .....	19
--	----

제1기 UPR 권고사항 및 정부입장 .....	27
---------------------------	----

유엔인권이사회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위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	33
--	----

제2기 UPR 권고사항 및 정부 입장 .....	43
----------------------------	----

## 부록 1

제2기 UPR 실무그룹 한국 심의 보고서(국문) .....	61
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	85

## 부록 2

NHRI,UPR 후속조치과정 가이드라인(국문) .....	111
Guidelines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the UPR follow-up process .....	121



# UPR 이해





## I. UPR 개요

### □ 의 의

- 유엔회원국 193개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각 나라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

\* 국제인권조약 감시기구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보완하는 제도

### 【 UPR 시행 배경】

- ◇ 구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특정 인권침해우려 국가를 지목 공개 비난하여 정치화된다는 논란이 지속
- ◇ 구 인권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유엔 총회 산하기관으로 2006.6 출범
- ◇ 인권이사회는 모든 국가(universal)의 인권상황을 정기적(periodic)으로 공동검토 (Peer Review)한다는 취지의 UPR 제도 도입

○ UPR은 특정국을 비난하기보다는 검토대상 국가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능력배양 및 자문 제공에 중점

※ UPR 권고 이행 책임주체는 정부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권고이행상황 점검하고 정부의 UPR 권고 이행 도모

### □ 목 적

- 실제 현장의 인권상황 향상
- 검토당사국의 인권보호의무와 인권준수의지 이행 및 인권관련 긍정적 발전상황이나 도전 파악
- 검토당사국의 인권보호능력 및 인권관련 기술적 지원 향상
- 국가들 및 이해당사자(stakeholders)의 좋은 사례 공유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 지원

- 인권이사회, 인권기구, 유엔고등판무관실과의 완전한 협력과 참여 장려

## □ 1기 UPR 운영 개요

- **기간** : 2008년-2011년(4년간)
- **운영방식**
  - 매년 48개국씩 총 192개 모든 유엔회원국 인권상황 심사
  - 심사를 위해 1년에 3차례 UPR Working Group 세션(세션당 2주간 개최)이 운영
  - 한 검토대상국당 3시간에 걸쳐 심사(질의·응답·권고)하고,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Plenary)에서 심사 결과를 최종 채택
- **검토 대상 문서**(심의 6주전 준비)
  - 검토대상국이 일반지침에 따라 작성한 국가보고서(20쪽 이내)
  - 검토대상국 견해와 의견을 포함한 협약기구, UN 공식문서 등을 OHCHR이 취합/요약한 문서(10쪽 이내)
  -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OHCHR이 10쪽 이내 요약)
- **검토 기관** : UPR Working Group
  - 읍저버 국가 및 여타 이해당사자는 검토에 참여가능
  - 인권이사회 회원가운데 서로 다른 지역 그룹에서 추천한 3개 이사국으로 보고관(Troica)이 구성되어 검토 결과 보고서 준비

\* 검토대상국은 상기 3개국 중 1개국을 자국 소속 지역그룹내 국가가 수입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1회에 걸쳐 상기 보고관 국가 교체 요구 가능
- **결과 채택 및 후속조치**
  - 결과보고서 내용은 검토회의 과정 요약, 권고, 결론, 자발적 공약 등이며,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채택(1시간 할애)

- 차기 검토회의는 이전 검토회의결과 이행에 초점

## □ 2기 일정 및 2기 UPR에서 변경된 내용

- 기간 : 2012.6월-2016년(4년 반)
- 운영방식
  - 매년 42개국씩 총 192개 모든 유엔회원국 인권상황 심사
  - 한 검토대상국당 **3시간 30분**에 걸쳐 심사
  -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정보 요약보고서에 **별도 섹션**이 국가인권기구가 제출한 **정보 보고서**를 위해 **할애**
  - 검토보고서 채택을 위한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발언 직후에 **국가인권기구가 발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1기 UPR 및 2기 UPR 비교〉

	1기 UPR	2기 UPR
심사주기	4년	4년 반
연간 심사국 수	매년 48개국 심사	매년 42개국 심사
심사대상국 당 심사시간	3시간	3시간 30분
국가인권기구 역할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요약보고서에 NI 제출 정보를 위한 별도 섹션 할애</li> <li>• 인권이사회 본회의시 정부 발언 직후 NI가 발언할 수 있는 권한 부여</li> </ul>

## II. UPR 업무 절차

### □ 심의 준비

- NI 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심의 날짜로부터 **6개월 전** 유엔에 정보보고서(5페이지 이내) 제출
- NGO 보고서(민변, 참여연대 등): 심의 날짜로부터 **6개월 전** 유엔에 정보보고서 제출
- ☞ UNOHCHR은 이해당사자가 제공한 정보 요약보고서를 심의 날짜로부터 6주 전까지 준비
- 국가보고서(외교부): 심의 날짜로부터 6주전까지 유엔에 제출

### □ 심의

- 심의전 로비활동(정부, NI, NGO)
  - \* Troica 국가 및 UPR에 관심이 큰 영국 등에 로비
- 심의(Working Group) 참석(정부, NI, NGO)
- 보고서 초안 채택(Working Group)
- 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정부, NI, NGO)
- 수용여부 검토(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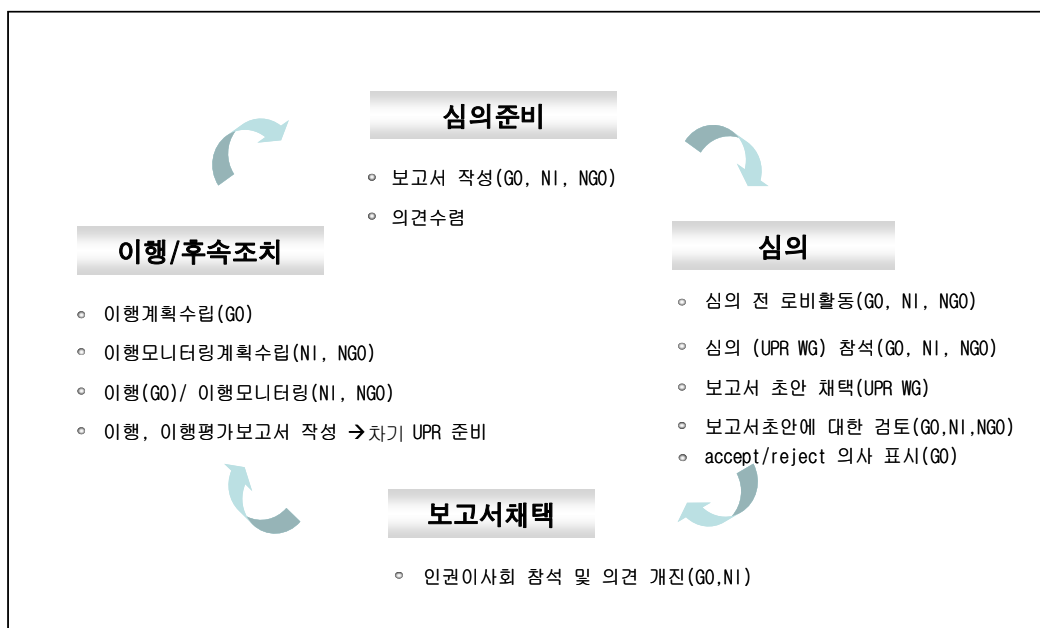
### □ 보고서 채택

- 인권이사회 참석 및 의견 개진(정부, NI)
  - \* NI, NGO 등 이해당사자는 심의 결과 채택 전에 일반 코멘트(general comment)만이 가능하였으나, 2기 UPR부터는 정부의 발언 직후 NI가 발언 가능

## □ 이행/후속조치

- 이행계획수립(정부)
- 이행 모니터링 계획 수립(NI, NGO)
- 이행/모니터링(정부/NI, NGO)
-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차기 UPR 준비(정부, NI, NGO)

### 〈UPR 업무 절차〉







# 대한민국 인권이사회 입후보, 자발적 공약 2013-2015





## 대한민국 인권이사회 입후보, 2013-2015

### 자발적 공약

#### I. 서론

1. 대한민국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두 번의 임기를 지냈으며, 2012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2013년-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위한 유엔총회에서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한다.

2.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 및 외교 정책 목표에 있어 인권 증진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전세계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인권 존중이 평화,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전제조건이라 확신하고 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7가지 주요 국제 규약 및 대부분의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으며, 관련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종차별철폐협약(1979)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1990)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1990)
- 여성차별철폐협약(1985)
- 고문방지협약 (1995)
- 아동권리협약 (1991)
- 장애인권리협약 (2009)

4.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 및 프로그램에 건설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세계 인권 옹호 운동에 있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대한민국

국정부는 권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UPR 과정 전반에 선의를 가지고 온전히 참여했으며 UPR 실무그룹 세션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도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는 상시적 초대를 포함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인권이사회에서의 긍정적인 참여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인권이사회 검토 과정에도 참여하였으며 이는 인권이사회를 더욱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일환이다.

5. 이에 더해,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주적 통치를 통해서만 인권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민주주의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민주주의 공동체 관리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회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6.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설립되었으며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이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A등급 기구이며 한국 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고 구제책을 제공하며, 대중인식을 제고하고, 인권과 관련한 법률, 제도, 정책 이니셔티브를 권고한다.

7. 대한민국은 2012년-2016년을 위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이행 중에 있으며 이는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권고에 따른 것이다. NAP는 인권과 관련한 209가지의 과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제인권의무에 맞춰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담고 있다.

8.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의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였다.

- 양성평등 (법 정부적 정책 형성에서의 젠더 영향 평가 이행 및 젠더 반영 예산 시스템)
- 취약계층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제정, 난민법 제정, 아동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 한국거주 외국인을 위한 비차별 대책 (2008-2012 제1차 외국인 기본정책 수립, 지방선거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정부 수반 선거 시 선거권 부여)

## II. 공약사항

9. 대한민국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위한 헌신과 더불어, 다음을 위해 노력한다.

###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증진

10. 인권증진 및 보호의 가장 높은 기준을 준수하며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닌다.

11. 대한민국 내 다양한 분야의 법률 개정 및 제도 발전에 따라 국제인권규범 조항을 국가적 차원에서 온전히 이행하며 유엔 인권규범 유보철회 및 참여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및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선택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의 비준
- 1993년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 및 1980년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비준
- ILO 해사 노동협약 비준
- 장애인권리협약 25조 E항 유보 철회 고려
- 강제실종협약 가입을 목표로 한 타당성 연구 및 기타 노력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가능성 연구

12.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약기구 권고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기구에 국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다.

13. 2012-201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이행을 강화하며 대한민국 내 인권향유를 위한 진정한 발전을 이룩한다.

14.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인권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5. 인권 및 굿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16.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며, 인권을 사회 모든분야 주류로 통합한다.
17.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두 번째 회기에 공개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참여한다.

###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 증진에 기여

18.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전 세계적 인권 증진 및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
19. 기술 협력, 자문 교류,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인권 의무사항 준수에 있어 다른 회원국과 협력한다.
20.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 법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존중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엔 시스템 및 양자 차원 협력을 강화한다.
21. 조약감시기구와 온전히 협력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조약기구 최종견해 및 권고사항에 믿음을 가진다.
22. 조약감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한다.
23.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준수기준 및 현실적 인권상황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한다.
24. 기술적 자문제공, 민주적 제도건설에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와의 전적인 협력, 민주주의 공동체 및 발리 민주주의 포럼 내에서의 활발한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 간 민주주의 발전 및 협력을 도모한다. .
25.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역 및 소 지역적 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6. ODA를 포함한 개발정책에 인권측면을 통합함으로써 파트너 국가의 인권,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다.

### 유엔인권이사회의 기여

27. 인권이사회 활동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며 인권이사회 업무 및 기능 수행을 지지한다.

28. 인권이사회를 공정하고 효과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를 통해 인권이사회가 긴급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한다.

29.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대상 국가와의 건설적 협력 및 대화와, 인권 이사회 특별 절차와의 온전한 협력을 통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 초대를 발부했으며 방문 시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0. 건설적 그룹간 대화 및 양보를 통해 인권이사회 내에서의 지역간 협력문화를 증진하며 업무 및 기능을 온전히 이행하게 한다.





# The candida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Human Rights Council, 2013-2015 (Voluntary Pledges and Commitments)





# The candida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Human Rights Council, 2013–2015

## Voluntary Pledges and Commitments

### I. Introduction

1. Having served for two terms as a membe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from 2008 to 2011,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decided to present its candidature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for the term 2013–2015 at the elections to be hel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in 2012.

2. The Republic of Korea attaches the utmost importance to human rights as a universal value and has placed highest priority on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in the pursuit of its national and foreign policy goals. In addi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fully committe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with the firm conviction that respect for human rights is a prerequisite for peace,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3. As a state party to the following seven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cluding most of their Optional Protocols, the Government of the ROK strive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conventions.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79)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0)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85)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 Punishment (1995)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1)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

4. At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Government of the ROK has been playing an active role in human rights advocacy around the globe by constructively participating in a wide range of discussions and programs for the promotion of all aspects of human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has fully engaged itself in the entire UPR process in good faith, including the follow-up to the recommendations, whil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UPR Working Group sessions. In addition, the ROK maintains a productive partnership with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cooperates fully with the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o which it has issued a standing invitation. In line with its positive engagement at the Council, it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review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aking part in the eff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ransform the Council into a more effective and credible body.

5. Furthermore, in the conviction that human rights is best served by democracy and democratic governance, the Korean Government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Community of Democracies (CD).? It has subsequently played a key role in the work of the CD as a member of the Governing Council and Executive Committee of the CD.

6.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HRCK), established in November 2001, is an indispensable institut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ccredited with A status by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HRIs (ICC), the NHRCK continues to make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it investigates and provides remedial measur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raises public awareness, and recommends legislative, institutional, or policy initiatives related to human rights.

7. In addition, the Republic of Korea is implementing 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 for 2012 to 2016,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made by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Covering 209 tasks in various aspects of human rights, the NAP outlines the Korean Government's commitment towards better human rights protection in line with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8. The Government of the ROK has also enacted new laws and adopted legal amendments to ensure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in a wide array of fields which include

- Gender equality(the implement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s in pan-governmental policy formulation and a gender-responsive budgeting system)
-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a full-fledged revision of Child Welfare Act for better prevention of child abuse, the enactment of Act on Welfare Suppor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enactment of Refugee Law, revisions of related law to ensure stronger punishment for the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 Non-discriminatory measures fo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Basic Plan for Policies on Foreigners 2008 to 2012', revisions of the Local Election Act to enable foreigners to have the rights to vote in the elections of local council members and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district etc)

## II. Pledges and Commitments

9. In line with its dedication to the noble aim of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Republic of Korea commits itself:

**To further advance human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by :**

10. Upholding the highest standards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with a strong commitment to human rights as a universal value.

11. Fully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t the national level and taking the following steps with respect to the withdrawal of reservations made to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UN human rights instruments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advancement of human rights in the ROK including legal amendments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s in a wide array of fields:

- Ratifying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and Optional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to the UNTOC (The Palermo Protocol)
- Ratifying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the 1980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 Ratifying ILO Maritime Labour Convention
- Considering the withdrawal of its reservations made to the Convention o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5 paragraph (e))
- Pursuing feasibility studies and other efforts towards becoming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the access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12. Cooperating and working closely with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ies, intensifying efforts to implement their recommendations, and ensuring the timely submission of national reports under the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the ROK is a party.

13.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NAP)’ for 2012-2016 in a transparent and accountable manner, thereby making real progress towards better enjoyment of human rights in Korea.

14. Strengthening effort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the vulnerable such as women, children, and the disabled, so that they can equally enjoy their human rights.
15. Enhancing cooperation and partnership with civil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16. Strengthening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to enhance public awareness and thereby incorporate human rights into the mainstream in all sectors of society.
17. Participating in the second cycle of the UPR in an open and constructive manner.

**To further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by :**

18. Closely cooperat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vance human rights and address human rights violations around the world, with a strong commitment to human rights as a universal value.
19. Cooperating with other member states in their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obligations through various mechanisms such as technical cooperation, exchanges of experts, and sharing experience and best practices.
20. Cooperating at the bilateral level as well as through the UN system for the strengthening of democracy, good governance, the rule of law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1. Cooperating fully with the treaty monitoring bodies, by timely submissions of periodic reports, and prompt actions and in good faith on their concluding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22. Contributing to the ongoing efforts to strengthen the treaty body system.
23. Rendering its full support to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its endeavor to elevate standards of human rights observance and advance

human rights conditions on the ground.

24. Promoting intra- and cross-regional democratic progress and cooperation by providing technical expertise, offering full cooperation to countries requesting assistance in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laying an active role i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munity of Democracies (CD) and Bali Democracy Forum (BDF).

25. Participating actively in the discussions for the creation of regional and sub-regional machinery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Asia-Pacific region.

26. Incorporating human rights perspective into its development policy, including ODA programs, thus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good governance in partner countries.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by :**

27. Remaining constructively engaged in the activiti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supporting the fulfillment of its mandate and functions.

28. Continuing its close collaboration with other member states to make the Human Rights Council a fair and efficient body, so that it can respond to urgent situ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a prompt and expeditious manner.

29. Strengthening its efforts to further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rough constructive engagement and dialogue with States under review, and cooperating fully with all the Council's special procedures, for which the ROK addressed a standing invitation, by rendering its full support necessary for the visit.

30. Fostering a culture of cross-regional cooperation within the Human Rights Council, by taking initiatives on constructive inter-group dialogue and compromise, thus enabl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its mandate and functions.



## 제1기 UPR 권고사항 및 정부입장



## 제1기 UPR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입장

번호	권고내용(국가)	입장
1	인권협약기구 견해(observations)의 이행 및 홍보 노력(브라질)	수용
2	장애인권리협약을 유보조항 없이 가입(브라질)	동 협약 25조(e)에 대해서는 유보 고려
3	효과적인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이행 노력 강화(인도네시아)	수용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채택(북한)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남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5	정치범, 양심수 관련 보안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채택(북한)	입장 계속 검토
6	고문방지위의 우려(형법상 고문 정의 부재 및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주장) 및 아동권리위의 우려(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관련, 입법, 사법분야 개선을 위한 조치 채택(북한)	국내법에서 고문 관련 모든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헌법 및 국제인권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 설치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자 권리 보호를 제한하는 다른 조약의 유보철회(멕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및 초국가범죄협약 인신매매 의정서(Palermo Protocol) 비준(페루)	이주자 및 동 가족들의 보호하기 위한 권고의 의도 및 정신을 환영하지만 국내 주요 법 규정과 충돌되고 있는 동 협약 가입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주자 등의 건강, 안전, 고용 등 인권을 관련 국내법하에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팔레르모 의정서 가입은 긍정 검토 예정
8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증진 및 차별금지 조치 채택(알제리)	수용
9	법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알제리)	수용
10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을 범죄화하는 입법 조치(알제리)	국내법에서 고문 관련 모든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
11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모든 단계에서의 이주자 인권 보장 조치(캐나다)	수용
12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조사(캐나다)	수용

번호	권고내용(국가)	입장
13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캐나다)	수용
14	부부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화, 동 행위자 기소 및 처벌, 관련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 아동 관련 형사절차에 아동 시각(child-sensitive) 반영 절차 채택(캐나다)	수용
15	이주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시 여성, 아동을 특별히 강조(캐나다)	수용
16	강제실종협약 서명(프랑스)	국내법 개정의 범위 등 연구후에 권고안에 대한 입장 정립 예정이며 현재 관련 연구중
17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금지 관행 해소(슬로베니아)	대체복무방안 연구중
18	UPR 후속이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여성 관점(gender perspective) 반영(슬로베니아)	수용
19	성범죄를 친고죄로 두고 있는데 주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규정 재검토 권고(슬로베니아)	관련 규정 검토 예정
20	사형집행에 대한 사실상 모라토리움 유지(벨기에, 이태리),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벨기에, 이태리, 멕시코), 2008.6.1 개최되는 새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특별법 통과(네덜란드, 영국)	폭넓은 국내적 합의 필요 형사사법, 사회현실 및 국민 여론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21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사항인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CEDAW 제1조에 부합되도록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대처 강화(벨기에)	수용
2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등 고문 및 학대 대처 조치 강화 및 효과적인 국내예방 메커니즘 설치(체크)	관련 부처간 협의 진행중

번호	권고내용(국가)	입장
23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도 차별금지법에 포함 (체크)	헌법, 인권협약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차별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인권위가 차별관행에 대한 활동 수행중
24	명확한 형법규정을 통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보안법 도입 및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적극적 조치(영국)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남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대체복무방안 연구중
25	명확한 시한을 정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 유보 철회(영국)	노사정협의 및 관련부처간 협의 필요 복수노조 및 공무원노조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2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영국)	관련 부처간 협의 진행중
27	사형제 폐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법사위가 유엔의 관련 문서(reference text)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진행중인 입법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고(룩셈부르크)	폭넓은 국내적 합의 필요 형사사법, 사회현실 및 국민 여론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28	여성의 권리 증진이 정부의 인권정책에서 주요 과제로 고려(이태리)	수용
29	학교내 아동체벌 금지 명문화하기 위한 관련법 즉각 개정 및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조치 이행(이태리)	관련 법령 보완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검토 지속
30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선택의정서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를 국제난민법에 맞게 개선(루마니아)	수용
31	호주제 폐지 및 결혼관계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담고 있는 개정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캠페인 실행(멕시코)	수용
32	가정폭력 관련 법령 강화, 사법시스템에의 접근을 포함한 이주자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멕시코)	수용
33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미국)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남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 유엔인권이사회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위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 유엔인권이사회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위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 1. 개관

1. 이 정보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실시함에 따라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한국 내 인권상황에 대해 제1기 UPR 결과 33개 권고의 이행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 2. 1기 UPR 권고의 이행 점검

#### A. 1기 UPR 권고사항 중 정부가 수용한 사항에 대하여

2. 대한민국 정부는 가입·비준한 7개 UN 핵심인권조약에 따라 정부보고서 제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심의를 받고 있고,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UPR 권고사항의 이행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종합적 체계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UPR 권고사항의 이행점검에 관한 정부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아울러 시민단체도 참여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의 법적 지위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회수가 제한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2011년 12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와 회수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였고 정부가 이를 일부 수용하여 관련 법을 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수준을 향상시켰다. 앞으로 정부는 이주민 관련 정책 입안과정에서 당사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과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주민 관련

정책 수립 시 2012. 2.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4. 정부는 2008년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동 법만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이주여성,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으로 여성가구가 된 결혼이주여성 등 모든 이주 여성의 인권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주여성노동자 차별방지,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모성보호,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에 대한 보장을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5. 야간옥외집회 금지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아직도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입법부의 조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확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는데, 정부는 집회시위의 장소적 제한, 신고제도 운영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진압장비의 운영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6. 검찰, 경찰, 교정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양은 많지만, 교육내용을 국제적 인권기준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효과적 교육기법으로 참여적이고 감수성을 자극하는 기법, 동료 간의 학습기법 등을 보완하여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체계화, 내실화를 위하여 인권교육법 제정과 인권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

7. 2010. 5.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의 고문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해당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고문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에 따르면, 검찰의 밤샘조사 및 장시간 조사대기 조치 등으로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개인 신상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해킹되어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정부는 2011. 12.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저장된 전자주민증을 보급하기 위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제도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을 폐기하거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는데 정부는 이 권고내용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행정기관

이 국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존의 시스템도 개선하여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오용이나 남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9.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가정폭력 예방 교육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이 여전히 사적 사안으로 인식되어 은폐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사건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조치와 이를 조사할 여성 수사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부강간에 관해서는 하급심 판례에서 범죄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법에 명문화할 것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관련법의 개정으로 비친고죄로 되었으나 성인 여성에 대한 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강간, 추행 등 일부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친고죄로 남은 것에 대하여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위 범죄들을 비친고죄화 하려면 처벌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0. 1기 UPR 결과 지적된 학교에서의 아동체벌금지 명문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내법령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면서 체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3.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도 체벌이므로 이를 학칙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변 보호 등 신고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11. 정부는 성인지 예산의 법적 근거와 성별영향평가의 실시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인지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009년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순위 61위(109개국 중)로 한국 여성의 공적 영역의 대표성과 전문직 여성비율은 현저히 낮고 남녀소득 격차는 높으므로 여성의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2.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CEDAW 제1조의 이행을 위하여 직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간

접적 차별의 금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간접차별을 포함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2005년) 되었고 2008년부터 발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족관계 등록이 기존의 호주(대부분이 남성) 중심에서 개인별로 편제되면서 가족 내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성 선택과 관련하여 「민법」 제781조에서 자녀가 성을 선택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CEDAW 제16조 1(g)항(자녀의 가족성 선택에서 부부의 동일한 권리 보장)에 대해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13. 정부는 난민 담당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난민인정에 관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법무부 내에 난민과를 신설하였다. 정부는 난민 인정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언어 교육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2013. 7. 시행 예정인 「난민법」의 취지에 맞게 난민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 B. 1기 UPR 권고사항 중 정부가 미수용한 사항에 대하여

14. 정부는 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처리되지 못하였다. 위 규정은 보험범죄로부터 심신상실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 바, 정부는 이러한 의미와 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 필요성이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위 규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e)조 유보를 철회하고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15.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17대 국회(2004~2007)에서 집중 논의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적용사범이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약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인권보장차원에서 「국가보안법」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16.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남용의 가능성을 이유로 「보안관찰법」의 개정 내지 폐지를 권고한 것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위 법에서 인정되는 보안관찰처분은 처분근거가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기준이 내용상 불명확하다는 점과 행정부 내의 위원회에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맡겨져 있는 점에서 오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정비와 합리적 운용 등 대책이 필요하다.

17. 「형사소송법」의 전면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고문과 학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18. 정부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바, 2008. 1. 14.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그 가입이 요청되며 협약 상 강제실종의 정의를 충분히 포섭하도록 법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를 규정한 자유권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도 국내법 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및 노동조합 가입공무원 범위 제한 규정을 이유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19. 양심이나 종교적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185명에 이르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군 복무의무를 요구하는 국민정서와의 갈등 등 현실적 어려움은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0. 정부는 사형제도폐지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사형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는 범죄수를 감축하는 등으로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인식변화 및 개선이 요구된다.

21. 우리나라가 2000년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유엔초국가범죄협약 및 인신 매매방지의정서(Palermo Protocol)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1. 10.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주여성이 다양한 경로로 성매매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이 성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초기입국심사 절차 강화 및 현장감시가 요구되며 나아가 법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22.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판례가 정립되고 동성애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판례상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또한 19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동성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1. 3.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에 관해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성적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23. 자유권규약 제22조 결사의 자유(단결권)와 관련하여 일반 공무원의 경우 관리지역할을 하지 않는 일부 직급의 경우에도 단결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경찰공무원과 군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을 불문하고 노동조합 결성 및 단결권이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2009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들에 대한 노동3권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3. 제언

24.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1기 UPR 권고 33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분야와 사회적 취약자 또는 소수자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로 수용한 소수자 보호를 살펴보면, 지난 4년 동안 특히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외동포 분야에서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과 같은 인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아직 부족하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의 다수가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임신·출산과 관련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요청된다.

25.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은 사항은 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분야였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보장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경찰공무원의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문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 중심적 제도와 관행을 자유신장적 방향으로 개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6. 대한민국은 1기 UPR 권고에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내에서는 특히 사회보장권, 노동3권, 주거권, 교육권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사회적 통합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을 위한 주거의 강제철거 시 거주민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교육권에 관해서는 소득별 또는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현장의 반인권적인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27. 대한민국은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 사안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세계화와 더불어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제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OECD 다국적 기업의 인권가이드라인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고자 설치된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하다.





## 제2기 UPR 권고사항 및 정부입장



## 제2기 UPR 권고사항 및 정부 입장

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ICRNW),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ICCPR-OP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수용
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OP-ICESCR)를 비준할 것 (스페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서명 및 비준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페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우선적으로 서명 및 비준하고 그에 따라 국내 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를 설립할 것 (체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고문이나 굴욕적인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내 기구를 설립할 것 (불가리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을 수행할 책임을 담당하는 국내기구를 설립할 것 (코스타리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 (슬로베니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 (튀니지)	국내법과 제도의 현황, 선택의정서와 국내법의 상충 여부,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필요성,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
4	진정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고려할 것 (슬로바키아)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5	나아가 국내 입법 절차에 따라 관련 협약, 특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필리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르완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 법률 개정 가능성을 고려할 것 (알제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모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할 것 (수단);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칠레); 불법체류(undocumented) 이주근로자를 포함한 이주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인도네시아)	동 협약 내용 가운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과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적용대상으로 이주노동자의 합법체류와 불법체류를 구분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기타 다른 국내법 규정과 배치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6	‘강제실종협약’(CPED)을 비준할 것 (스페인); ‘강제실종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강제실종협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 (이라크)	강제실종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강제실종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국내법의 정비와 함께, 자유박탈자 관련 기록 관리 등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7	최근의 국제노동기구 제189호 ‘가사노동협약’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필리핀);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제98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협약’ (제29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 (우루과이)	협약의 일부 조항이 국내 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향후 국민적 공감대, 우리나라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ILO 협약 비준 방안을 검토할 예정 가사사용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보호방안 마련 등을 거친 후 협약 비준 여부를 검토할 필요
8	UNESCO ‘교육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 (이라크)	수용
9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프랑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할 것 (온두라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아일랜드)	수용
10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즉, ‘아동권리협약’, ‘자유권규약’,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남아 있는 유보의 철회를 고려할 것 (슬로베니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는 사회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관련된 「민법」 개정 필요성과 유보 철회 여부를 검토할 예정(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은 비상계엄 시 상소권 제한을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와 상충하고 그 개정을 위해서는 안보상황의 변화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국방부)
11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 (독일);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 (아일랜드)	수용

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12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가능성을 제한하는 상법 제 732조를 개정할 것 (코스타리카)	수용
13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따라 형법에 고문 범죄를 포함시킬 것 (멕시코); 국내법과 고문의 정의에 관한 ‘고문방지협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것 (튀니지)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고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범죄화되고 처벌될 수 있음 형법에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
14	국가인권기구와 그 독립성을 강화할 것 (스페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독립성과 자원을 더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튀니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권리 보호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호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 운영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임
15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및 조약기구로부터의 권고 이행에 관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것 (불가리아); 시민사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UPR 결과를 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UN 인권이사회에 이번 UPR 권고의 이행에 관한 중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 (헝가리)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16	고문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 (벨라루스); 인종차별,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제한, 인신매매와 같은 분야에서 관련 UN 인권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것 (우즈베키스탄)	수용(대한민국은 이미 특별절차에 관하여 ‘상시초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음)
17	독립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사례와 관련된 인권훈련을 위한 노력을 증대할 것 (이란)	수용
18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수용

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19	아동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충분한 자원을 배정할 것 (말레이시아); 모든 영역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입법 발전 및 정책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기구를 설립할 것 (오만);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 (일본); 아동,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 집단인 장애 아동을 위해 적절한 시설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이란)	수용
20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 정서’의 규정과 완전히 조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용
21	소수 인종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차별 피해자에게 법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 (캐나다)	수용
22	여성과 기타 소외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 (네팔); 특히 국내 법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한 노력을 강화할 것 (알제리)	수용
23	차별금지 일반법에 관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것 (인도네시아); 차별 철폐를 위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조치를 취할 것 (팔레스타인); 차별금지법 채택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것(칠레); 관련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슬로베니아); 2008년 5월에 중단된 법을 대체하는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차드); 차별금지법 통과를 보장할 것 (인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호주)	수용
24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위한 차별사유를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체코);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확히 포함시킬 것 (스페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성적 지향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

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25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상 및 실제상으로 남녀 간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지속할 것 (팔레스타인); 남녀 간의 법률상 및 실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입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용
26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및 차별 근절을 위해서 양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 (중국); 정부 정책 내 효과적인 양성 평등을 더욱 보장할 것 (몰도바);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 그리고 모든 국가 기관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및 참여 강화를 목표로 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 (오만); 여성, 특히 미혼모(single mothers)가 고용, 동일 임금, 부부간의 권리(matrimonial rights), 특히 상속이나 이혼에 따른 부부간의 권리에 남성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증대할 것(벨기에)	수용
27	가정에서의 공동책임을 증진하고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교육 및 인식제고 조치에 착수하는 것을 고려할 것 (폴란드)	수용
28	미혼모(single mothers)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 (브라질); 법률상 및 사실상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인식증진 캠페인을 수행할 것 (멕시코);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하여 지원하고 조언을 제공할 정부 기관을 설립할 것 (독일)	일부 수용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이를 위한 국가적 인식증진 캠페인에 관한 사항은 수용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조언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기 수행 중
29	아동에 대한 무국적 상태를 방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등록을 개선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할 것 그리고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 없이 출생 직후 자동적 및 법률적으로 등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도입할 것 (노르웨이); 부모의 지위나 국적과 관계 없이 출생 시에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등록 제도의 이행을 촉진할 것 (프랑스); 국내에서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 없는 즉시 출생등록을 포함하는, 완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할 것 (아일랜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父)나 모(母)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출생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정확한 출생신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는 주한 자국대사관 등을 통하여 자국

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29	<p>부모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 없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자동등록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그 체류 자격(migrant condition)이나 부모의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출생 시에 등록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내법을 개정할 것 (멕시코); 인신매매 가능성을 철폐하기 위하여 출생 시 아동의 등록(civil registration)에 관한 조치를 법제화할 것 (루마니아); 개인정보 보호 및 특히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출생 시의 자동적 및 법률적 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 (스위스);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미혼모와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출생등록제도를 재검토할 것: (i)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즉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장; (ii) 출생등록이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보장; (iii) 정당한 사법적 감독이 없이 사실상 입양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아동을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양부모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채택 (캐나다)</p>	<p>정부의 관련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함</p> <p>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부모가 난민인정 등의 사유로 국적국에 출생 신고를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병원 등의 출생증명서에 의하여 그 부모와의 생물학적 관계가 확인되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체류허가(외국인등록 포함)를 하고 있음</p>
30	<p>인종차별주의(racism),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xenophobia)를 철폐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쿠바)</p>	수용
31	<p>차별,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모로코);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 및 학대를 철폐할 것 (스페인)</p>	수용
32	<p>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고 그 자녀가 교육 및 보건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및 법률을 지속적으로 채택할 것 (수단); 여성 및 아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그들의 교육 및 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 (이란)</p>	수용



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33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적 대우의 철폐를 목표로 한 조치의 강화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수용
34	군대 내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법률의 폐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 (미국)	군형법 제92조의 5(추행죄)는 병영 내의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처벌하여 성군기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성애 등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님
35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 (르완다);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위스);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슬로베니아); 완전한 금지를 위해 사형 적용을 규정한 형법 규정을 개정할 것 그리고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우루과이);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사형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의 확립 가능성을 고려할 것 (칠레); 현재의 사형집행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공식적 모라토리엄으로 전환할 것 (독일); 사형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집행 및 판결 선고에 관한 법률상 모라토리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스위스); 모든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도입할 것 그리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 (영국); 사형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것 (벨기에); 대한민국이 사형제를 유지할 것이라면, 사형에 관한 국제적 최소기준을 존중할 것 (벨기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 (온두라스); 법률에 의한 사형제 폐지 가능성을 고려할 것 (우즈베키스탄); 사형제 폐지 가능성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노르웨이); 기존의 판결선고를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슬로바키아); 사실상 10년 이상 집행이 유예되어 온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입법적 절차를 완결할 것 (터키); 사형제를 법률상 폐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프랑스); 사형을 명확하게 폐지할 것 (스페인); 사형제를 폐지할 것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호주)	사형제 폐지 및 집행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론과 법감정, 사회현실,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형제 폐지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임

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36	경비병력(security forces)이 특히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 설립을 고려할 것 (폴란드)	경찰의 물리적 사용에 대한 감시기능은 국회,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 경찰위원회,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 설립은 필요치 않음
37	고문 및 학대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 (체코); 경찰에 의한 고문에 관한 모든 주장을 조사할 것 그리고 가해자를 기소할 것 (벨라루스)	수용
38	완전한 체벌 금지 확립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적 조치로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동 학대의 부정적 결과에 관한 대중 인식증진 캠페인을 실시할 것 (우루과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헝가리)	수용
39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한 그 노력을 지속할 것 (몰도바);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것, 더 많은 여성 경찰관을 채용할 것,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재활서비스를 개선할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 (헝가리); 가정폭력이 정당하게 처벌되고 부부간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보장할 것 (슬로바키아)	수용
40	아동과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채택할 것 (이라크); 아동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역량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키르기스스탄); 아동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세네갈)	수용
41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보츠와나);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격하게 강화할 것 (벨라루스)	수용
42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말레이시아);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물론 그와 동등하게 강제노동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하여도 이를 철폐함에 있어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 (몰도바)	수용

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43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노력 증진을 고려할 것 (필리핀);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 (브라질);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 (네덜란드)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 (영국); ‘팔레르모 의정서’ 가입과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방문 허용을 포함하여, 인신매매를 철폐함에 있어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벨라루스); 특히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를 확인하고 돌보기 위한 추가적인 사전적(proactive) 조치를 취할 것 (벨기에)	수용
44	지뢰 피해자에게 사회심리적, 의학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고려할 것 (태국)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타 피해 유형자들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등을 고려 종합적 검토 예정
45	사법제도에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채택할 것 (헝가리)	수용
46	법의 지배와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 (베트남)	수용
47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아동권리협약’과 완전히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입양제도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것; 절차 상 10대 미혼모의 동의를 의무화할 것; 모든 입양이 사법적 감독 및 규율을 위한 명확한 임무와 책임을 보유한 중앙 당국의 허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 (온두라스); 국가입양센터를 설립하고 출생 후 등록권에 대한 의무를 확립할 것 (독일)	수용
48	여성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일본); 남녀간의 지속적인 임금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슬로베니아)	수용
49	사업장에서의 성희롱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이행할 것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설립할 것 (네덜란드)	성희롱 범죄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위한 신중한 검토 필요
50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일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것 (폴란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 (스위스)	수용

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51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채택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집회의 자유는 헌법을 통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음
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이전할 것 (스위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한국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관련한 법률 헌법 소원 사건에서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12. 2. 23.)
53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병역에 대한 대체복무가 사실상 비군사적(civil) 성격을 갖고 민간 당국의 감독 하에 실시되도록 현행 국내법을 개정할 것 (프랑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을 폐지하고 비군사적 복무를 확립할 것 (독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것 (폴란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 (슬로바키아); 병역에 대하여 진정한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적 사회복무를 보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할 것 그리고 현재 구금되어 있는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할 것 (스페인); 대체복무가 비전투적 또는 비군사적 성격을 갖고 처벌적 성격이 없을 것을 보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선택권을 즉시 도입할 것 (미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 (호주)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상황, 징병제 하에서의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민적 공감대의 미형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이 곤란하나, 향후 안보상황의 변화 및 사회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고려하여 검토
54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검열의 풍토를 초래하는 수사, 구금, 기소(charges)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집행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정당한 집행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미국)	수용

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55	“국가보안법”에 따라 부당하게 체포되고 수감된 통일 지지 애국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석방할 것 (북한)	국가보안법의 해석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적용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남용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
56	인권 원칙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것 (호주); 국가보안법이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의 집행 방식을 구체화할 것 (프랑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주의주장을 찬양·동조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57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 (독일);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적용과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고려할 것 (노르웨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스페인); 국가보안법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미국); “국가보안법”으로서의 형사법을 폐지할 것 (북한)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임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남용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
58	기존 정치범과 양심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할 것 (북한)	보안관찰 제도는 대상자의 내심이 아닌, 동종범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 특히, 법무부는 ▲ 보안관찰처분 요건인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실질적 심사 ▲ 법무부 사안 조사 공무원의 기록 검토 외에 당사자 대면·전화조사 등 철저한조사 수행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 등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보안관찰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59	대한민국의 빈곤퇴치전략에 충분한 재원을 배정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통합 약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증대할 것 (이란); 경제 발전의 성과가 모든 계층에게 이익이 되도록, 빈곤층의 보건 및 주거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것 (중국)	수용
60	특히 보건, 교육 및 식품 영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조치를 지속할 것 (쿠바);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바레인)	수용
61	2018년까지 저소득 가족에게 안정적이고 알맞은 비용의 주거를 보장하는 “보증자리 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쿠웨이트)	수용
62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쿠웨이트)	수용
63	증가하고 있는 등록금을 교육 수준과 조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란)	수용
64	다문화 프로그램을 난민, 망명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지역적 통합을 증진할 것 (보츠와나)	난민법 시행(13.7월) 후 정책수요 파악, 관련 법과의 관계 검토 등의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입장 계속 검토
65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mobility)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프랑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중
67	인신매매 및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 및 복지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강화할 것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네팔); 이주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할 것 (세네갈);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 (스리랑카); 적절한 복지와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 (태국)	수용

번호	권고내용(국가)	정부 입장
68	난민,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보호를 목표로 한 조치를 강화할 것 (벨라루스)	수용
69	불법(irregular) 이민 문제를 온정적으로 처리할 것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적 보호를 고려할 것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는 실정법을 위반한 자이므로 단속의 대상이 됨 다만, 단속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등 고충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70	공적개발원조 기본원칙과 같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둔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파라과이)	수용





## 부 록

1. 제2기 UPR 실무그룹 한국 심의 보고서(국문, 영문)
2. NHRI, UPR 후속조치과정 가이드라인(국문, 영문)



## 1. 제2기 UPR 실무그룹 한국 심의 보고서 \_국문





## 서론

1. 2007 년 6 월 18 일 인권이사회 결의 5/1 에 따라 설립된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실무그룹은 2012 년 10 월 22 일부터 11 월 5 일까지 제 14 차 회기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는 2012 년 10 월 25 일, 제 8 차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대표단의 단장은 김태기 법무부 차관이었다. 2012 년 10 월 31 일에 개최된 제 13 차 회의에서 실무그룹은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 2012 년 5 월 3 일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지부티, 헝가리, 인도네시아의 3 개국으로 보고관들 (트로이카)을 선정하였다.
3. 결의안 5/1 의 부록의 15 번째 문단 및 결의 16/21 부록의 5 번째 문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심의를 위해 다음의 문서들이 발행되었다:
  - (a) 15 (a) 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 국가보고서(A/HRC/WG.6/14/KOR/1 and Corr.1);
  - (b) 15 (b) 항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작성한 문서(A/HRC/WG.6/14/KOR/2);
  - (c) 15(c)항에 따라 OHCHR 이 작성한 요약본 (A/HRC/WG.6/14/KOR/3 and Corr.1).
4. 체코 공화국, 독일, 아일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이 사전에 작성한 질의서는 트로이카를 통해 대한민국에 전달되었다. 상기 질의서는 UPR 의 엑스트라넷(extranet)에 게재되어 있다.

## I. 심의과정 진행 개요

### A. 심의대상 국가의 발표

5. 대한민국은 약 50 년 만에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으며 모든 분야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공평한 인권 보장을 위해 사회의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에 집중해왔다.
6. 대표단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련 NGO 들과 협의를 하는 등의 국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7. 1 차 UPR 심의의 결과는 2008 년 국가인권정책협의회(NHRPC)에 보고되었다. 2010 년 이후부터는 1 차 심의시의 권고들이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연례조사가 주로 법무부를 통해 이루어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되었다. 정부는 2 차 UPR 주기 이후 본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계획하였다 .
8.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을 작성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2 차 NAP 는 2012 년 3 월에 확정되었는데, 인권 보호 증진과 관련된 24 개 부처의 209 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계획 초안 작성 과정에서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NHRC)의 권고들과 여러 국제 인권 기구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들도 검토하였다.

9. 인권 의무 이행 노력과 관련해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아동권리협약 제 9 조 제 3 항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7 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

10. 대한민국은 비준한 7 개 핵심 인권 조약에 의거해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개인통보들에 성실히 답변하였다.

11. 2012 「난민법」은 2013 년 7 월에 발효될 것이다. 이 법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난민 지위 인정 절차 및 개선된 난민 보호 방안들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난민 지원 센터가 설립 중이었으며, 난민신청자 및 난민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12. 차별금지조치와 관련해 대략 90 여 개의 개별 법률들이 현존한다. 이러한 법률들과 별도로 국내 및 국제 사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했다.

13. 개인의 안전권과 관련해, 「인신보호법」이 2008 년 6 월부터 시행되어왔다.

14. 대표단은 가족 구조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를 언급했다. 정부는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해당 가정의 자녀들이 정당한 보호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11 년에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가정폭력을 겪은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교육 지원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왔다.

15. 대표단은 개인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과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되었다. 또한 정부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교정할 방안들을 강화했다. 주민등록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사용이 제한되었고, 개인 검증을 위한 대안 마련이 의무화되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공공 문서에 기재하도록 노력해 왔다.

16.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되었다

17.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종합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행하였다.

18.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개별 고용보험과 국가연금보험료 두 가지에 모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19. 직장 내 복수 노조 도입으로 노조 결성권 보호도 강화되었다.

20.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보급도 강화되었다. 적절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

21. 최저생계비를 감안해서, 또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낮추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사회보장에 의한 보호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22. 국민의료건강보험의 보장도 출생에서 노년까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희귀성 질병과 불치병 환자 등 일부 환자들의 부담 비율도 낮아졌다. 대한민국은 희귀성 및 불치병 환자들에 대한 의료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 의료 지원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23. 급속한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정부는 노인 간병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 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치매 환자들을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24. 정부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도입,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종합적인 이민자 정책의 증진을 위해 5 년마다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3 년부터 시행될 2 차 계획의 목표는 이민자들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확대해 이민자의 사회 적응을 돕고 이민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에 있다.
25.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양한 노동 관련 규정에 의거해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보호를 받았다. 통역, 상담 및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여성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근로 기준법에 따른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동일한 권한이 보장되었다. 여성 이주 노동자가 인권침해에 관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불법이주자라 하더라도 추방을 유예하고 특별 체류가 허용되었다.
26. 대한민국은 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모범 사례가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 2010 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정부는 개발 사업의 기획과 이행 과정에 인권 원칙들을 고려할 생각이다.

## B. 상호 대화 및 심의 대상 국가의 답변

27. 상호 대화에서 65 개국이 발언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권고안들은 본 보고서 섹션 II 에 명시되어 있다.
28. 보츠와나는 1 차 심의 이후 진행된 대한민국의 발전을 치하하고 「아동권리협약」 제 9 조상의 유보 철회 및 장애인을 위한 관련 정책의 발전된 모습을 언급했다. 보츠와나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기한 아동에 대한 다중적 차별에 대한 우려 사항들을 언급했다. 보츠와나는 권고안들을 제시하였다.
29. 브라질은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및 장애인관련 법 제정, 장애인 지원 정책 채택을 언급했다. 브라질은 한국의 독신모들이 겪는 사회적 낙인과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브라질은 2011 「입양특례법」의 개정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를 희망했다. 브라질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30. 불가리아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범적 및 제도적 틀의 실질적 발전과 제 2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출범을 언급했다. 불가리아는 2012 년 3 월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범위가 확대된 것을 언급했으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CA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가리아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31. 캄보디아는 대한민국의 그간의 성과들을 치하하고 2012-2016 제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환영했다. 캄보디아는 모든 미해결 인권문제들, 즉 인신매매,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그리고 국제조약의 추가비준고려 등을 해결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인정했다. 캄보디아는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32. 캐나다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 정책에 있어서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조치에 대해 최근까지의 정보를 더 보충해줄 것과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캐나다는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국 경찰이 가정 폭력 사건을 가볍게 다룬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했다. 캐나다는 또한 E2비자외국인에 대한 HIV 및 마약 검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캐나다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33. 차드는 2008 년에 제시됐던 권고안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이 수용했다는 것과 여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차드는 UPR 에 대한 후속으로 2009 년에 채택한 조치들을 환영했다. 차드는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34. 칠레는 2008 년 이후 UPR 권고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칠레는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수준을 치하했다. 칠레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기했던, 대한민국 교육체제에 만연한 극심한 경쟁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질문했다. 칠레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35. 중국은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환영했다. 중국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제공 및 노년층과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치하했다. 한편 중국은 극심한 성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만연한 아동 체벌 및 학대, 인신 매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비보호, 빈곤층의 건강보험 이용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국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36. 코스타리카는 1 차 UPR 심의 때 제시된 권고안들의 이행에 관한 정보에 감사를 표했다. 코스타리카는 미혼모 자녀에 대한 차별, 부부 강간 처벌 부재, 가정 폭력 및 이혼 시 불평등한 자산 배분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코스타리카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37. 쿠바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계획을 환영하며, 대표단이 이와 관련한 정보를 더 제공해줄 수 있는지 질문했다. 쿠바는 대한민국이 국제조약비준 및 유보의 철회,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도록 독려했다. 쿠바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38. 사이프러스는 인권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들을 치하했으며 대한민국이 주요 인권조약의 대부분에 가입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사이프러스는 2011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정 등과 같은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환영했다. 사이프러스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과 출산휴가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질문했다.
39. 체코 공화국은 대한민국의 UPR 과정에의 참여를 치하했다. 체코 공화국은 차별금지법의 도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체코 공화국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가입에 대한민국이 관심을 보인 것을 환영했다. 체코 공화국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40. 북한은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조직적 인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인권들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침해되어왔고, 특히 제 7 조가 언급되었다. 북한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41. 프랑스는 사형집행의 유예를 환영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의 도입 및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치하했다. 프랑스는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방안들이 도입되었는지 질문했다. 프랑스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42. 독일은 1 차 UPR 의 권고들을 이행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치하했다. 독일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장기 형량, 독신모 및 그 자녀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독일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43. 온두라스는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출범 및 국제인권기구들과 UPR 제도에서 제시된 권고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아동 인권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온두라스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44. 헝가리는 성 평등 및 여성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언급했다. 헝가리는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독신모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헝가리는 대한민국이 아동폭력 및 학대를 막고, 차기 UPR 주기 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독려했다. 헝가리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45. 인도는 「아동권리협약」 제 9 조 제 3 항에 대한 유보 철회 및 「사회보장법」과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의 도입을 환영했다. 인도는 또한 상기 법안 이행을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희망했다. 인도는 차별금지법안이 지연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인도는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46. 인도네시아는 국가인권위원회 의 조사 권한이 확대된 것을 치하했다. 인도네시아는 2013-2017 제 2 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마련에 주목했다. 인도네시아는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방안들을 환영했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 개발원조의 확대 및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중점을 둔 중기 정책의 입안 등을 치하했다. 인도네시아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47. 이란은 인권 침해, 특히 아동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우려를 표했다. 이란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48. 이라크는 국가계획 채택을 통한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들을 치하했다. 이라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환영했다. 이라크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49. 아일랜드는 대한민국에 보편적인 출생등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출생과 주민등록 시점 사이에 아이들이 비밀리에 입양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일랜드는 2010 년 조사에 따르면, 무려 17,000 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아일랜드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50. 이탈리아는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노력을 인정했다. 이탈리아는 사실상의 사형집행 유예를 높이 평가했다. 이탈리아는 또한 보편적 출생등록 시스템의 미비 및 심각한 가정폭력 문제들에 대한 보고에 우려를 표했다. 가정 폭력의 형사적 본질에 대한 인식제고 및 학교 내 체벌 금지 방안들을 언급하고 추가정보를 요청했다. 이탈리아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51. 일본은 「아동복지법」의 개정, 학교 내 체벌 금지 조항 마련,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을 환영했다. 또한 일본은 아동 인권 보호에 있어서 부족한 점, 즉 아동 인신 매매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성 착취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일본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52.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표단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고문의 정의와 관련해 기존 법에 명시된 조항 외에 형법상에 관련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을 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국내법 간에 배치되는 점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국내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수감 및 보호 시설에 대한 시찰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정서가 의도하는 예방 효과는 이미 상당부분 달성했다.
53. 제 2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보편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과제가 포함 되었다. 정부는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및 간접 차별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54.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강조되었다.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철폐 여부는 공론적 합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남용 또는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법 해석을 엄격히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 7 조는 반정부 조직을 단순히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근본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지난 5 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억류되는 사람의 수는 꾸준히 연 20 명 정도에 머물고 있다.
55. 출생 등록 및 입양에 관해서는, 2008 년에 법이 개정되어 입양아도 친자녀와 같은 권리와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입양이 아니라 출생한 것으로 등록하는 과거의 문제들은 상당부분 시정되었다. 법적 통제도 강화되었다. 입양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56. 정부는 2008 년 ‘여성·아동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고 있으며, 2009 년에는 ‘아동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 그리고 2011 년에는 ‘가정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도 강화되었으며, 미성년 피해자가 법적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유예 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계속해왔다.
57. 경찰청은 ‘아동포르노방지대책반’을 구성해 아동 포르노의 제작, 유포, 소지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58.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 등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침해를 결정하는 기준은 개별 국가의 가용 자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의정서의 비준에는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59.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은 국내 노동 시장의 특성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60. 정부는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의 가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 가령, 이전까지는 사설 입양 기관에서 감독해왔던 국제 입양을 이제는 정부가 감독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헤이그 협약 비준에 앞서 최근에 출범한 ‘법원허가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
6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육비, 교육비 및 생활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저소득 미혼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상담과 훈련 등을 지원하는 자활 및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었다. 또한 십대 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학칙 등이 개정되었다.
62.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정부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전면 금지시켰다. 학교는 의무적으로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인 훈육방식과 기준을 수립, 적용해야 했다. 「아동복지법」은 2012년 8월 5일 개정되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내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63. 소득수준 및 지역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교육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교육, 문화 및 복지 분야에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조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었다. 정부는 고등학교 형태를 다양화 했다. 정부는 또한 과도한 대학 입학 경쟁을 줄이기 위해 단순히 성적 비교가 아닌,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했다. 정부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64.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의 도입은 안보 상황 및 남북한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대체 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병역법」 조항이 합헌인 것으로 판결했다. 대체 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폐기되었다.
65. 쿠웨이트는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긍정적 진전을 치하였다. 쿠웨이트는 1차 심의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확대 및 여타 긍정적인 법적, 제도적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쿠웨이트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66. 키르기스스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범위 확대와 국제인권조약 유보 철회를 환영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설치 및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의 제정을 치하였다. 특히, 최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높이 평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67. 라오스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 인권증진을 위한 개발지원의 확대,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에 주목했으며, UN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독려했다.
68. 말레이시아는 국제인권조약 준수를 위한 조치들을 환영했다. 말레이시아는 제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대 등에 고무되었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공적 개발원조사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인도주의 정신의 고취를 환영했다. 말레이시아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69. 멕시코는 인권 보호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이룬 발전을 치하였다. 또한, 「강제실종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관리협약」 등의 비준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상기 조약의 비준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멕시코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0. 모로코는 권고안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을 치하했다. 또한, 국가 보고서에 나타난 훌륭한 실천방안들을 환영했다. 모로코는 건강권, 사회권, 교육권 및 노동권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모로코는 2008 년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환영했다. 또한 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들을 환영했다. 모로코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1. 네팔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개정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그 이행 모니터링 방안 및 UPR 후속 행동을 채택한 것을 치하했다. 네팔은 20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라는 주요 입법에 주목했다. 네팔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2. 네덜란드는 인권적 관점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치하했다. 대한민국이 곧 사형제도를 철폐할 것을 희망했다. 네덜란드는 또한 고용부문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우려를 지적했다. 네덜란드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3. 노르웨이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미혼모의 권리, 아동의 권리 및 「국가보안법」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노르웨이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노르웨이는 사형 집행에 대한 사실상의 유예에 고무되었다. 노르웨이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4. 오만은 대한민국이 국내에서와 국제적인 차원 모두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만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5. 팔레스타인은 모든 아동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언급하고, 교육 정책을 재검토해서 아동이 처한 압박상황의 정도를 낮추는 추가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독려했다. 팔레스타인은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언급했다. 팔레스타인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6. 파라과이는 특히 2012-2016 제 2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같은 중요한 노력을 인정하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이라는 진전을 언급했다. 파라과이는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77. 필리핀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 실현을 높이기 위한 법 제정,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그리고 수 천명의 필리핀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을 환영했다. 필리핀은 대한민국이 아직 보호가 안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추가 입법을 독려했다. 필리핀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8. 폴란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출범을 환영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들로 여성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포함된다고 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폴란드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79. 몰도바 공화국은 정부 정책 내 효과적인 양성평등을 목표로 한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의 제정에 만족을 표시했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 및 처벌,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인정했다. 몰도바 공화국은 인신 매매 퇴치를 위한 강한 의지에도 만족감을 표했다. 몰도바 공화국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80. 루마니아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 보호에 있어서의 진전과, 사회 모든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진일보를 치하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는 인권보호 증진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루마니아는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81. 르완다는 이전 심의 때 나온 권고안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인상적인 상당한 노력에 만족감을 표했다. 르완다는 개발원조의 근본 원칙으로 여성과 아동 인권의 증진, 양성평등의 실현, 인도주의 증진 등을 명시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을 환영했다. 르완다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82. 세네갈은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여러 방안, 즉 제 2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발간,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범위 확대, 아동 성학대 예방을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장애 아동 및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교육 접근성 증대 등을 언급했다. 세네갈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83. 슬로바키아는 대한민국의 제 2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채택 및 개발원조의 근본 원칙으로 여성과 아동 인권의 증진, 양성평등의 실현, 인도주의 증진 등을 목표로 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을 환영했다. 슬로바키아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84. 슬로베니아는 제 1 차 UPR 주기 이후 대한민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중 하나를 철회했다는 사실을 환영했다. 그러나 몇몇 인권조약은 아직 비준이 안된 상태이고 유보조항도 여럿 남아있다. 슬로베니아는 여성차별에 대한 보고에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계획했는지 질문했다. 슬로베니아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85. 남아프리카는 그 동안의 진전,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언급했다. 남아프리카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논의해서 제정할 확실한 방안들에 대해 질문했다. 남아프리카는 여성 차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부족 등에 우려를 표했다. 남아프리카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86. 스페인은 제 2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과 1997 년 이후 사형집행이 실질적으로 유예된 것을 축하했다. 스페인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87. 스리랑카는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 그리고 양성평등 및 성 형평성에 있어서의 진보를 치하했다. 스리랑카는 또한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조언해주기 위한 상담센터와 여러 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관련 불만을 다루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것을 치하했다. 스리랑카는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88. 수단은 교육분야에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아동을 포함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했다. 수단은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에 대해 질문했다. 수단은 폭력과 차별을 겪는 여성 이주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의 인권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강조했다. 수단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89. 스위스는 사형집행이 사실상 유예되어 수년간 지켜져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대한민국은 2008년부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 조항을 더 제한적으로 해석해온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는 출생 등록제도에 있어서의 결함을 언급했다. 스위스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90. 태국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들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긴급지원센터들을 설립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들 센터에 통역관들을 추가로 배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태국은 이주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언급했으나, 여행 문서를 압수하고 원치 않는 재배치를 하는 등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우려를 표했다. 태국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91. 동티모르는 대한민국이 여성대상 맞춤 일자리 창출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고용 평등을 가져오는 대신 남녀간 구별을 더 심화시킬 위험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질문했다. 18 대 국회에 상정된 2 개의 차별금지법 법안들이 이번 회기 말에 만료되었는데, 다시 법안이 상정되도록 계획이 잡혀있는지 질문했다.
92. 튀니지는 소외계층 자녀 및 장애아동들을 포함, 아동의 교육권 보장 조치를 언급했다. 또한 가정폭력을 퇴치하고 아동과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언급했다. 튀니지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을 독려했다. 튀니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도입을 환영했다. 튀니지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93. 터키는 2012 년 제 2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치하했다. 터키는 국제개발원조프로그램 이행을 통한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노력을 독려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주목했다. 터키는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94. 영국은 대한민국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비준 시한을 정할 의향이 있냐고 질문했다. 여전히 사형제도가 합법인 것에 영국은 우려를 표했다. 영국은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을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촉구했다. 영국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95. 미국은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알겠으나, 법이 모호하고, 어떤 경우 인터넷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우려했다. 미국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96. 우루과이는 제 2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 국제인권조약 유보 일부 철회, 「인신보호법」 제정, 조약감시기구에 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 및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와의 협력 등을 강조했다. 우루과이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97. 베트남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내 법체계의 강화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했다. 취약계층의 인권 보장에 따르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음을 언급했다. 베트남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98. 알제리는 2012-2016 제 2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언급했다. 알제리는 상담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돕고 있는 이주 노동자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알제리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환영했다. 알제리는 아동 및 노년층의 인권 증진과 건강권, 교육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만족감을 표했다. 알제리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99. 아르헨티나는 2012-2016 제 2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인신보호법」과 「난민법」의 제정을 축하했다. 아르헨티나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100. 호주는 사형제도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며, 사형집행 유예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호주는 대한민국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남녀간 상당한 소득 격차가 존재하며,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그룹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방지할 포괄적인 법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호주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101. 바레인인 모든 아동의 교육권 보장, 특히 저소득층 및 장애 아동들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과 수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 바레인인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102. 방글라데시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여러 법률을 개정된 것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출입국관리법」이 재차 개정된 것을 환영했으며, 이 법의 개정으로 이주민들이 당연한 권리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이주민의 착취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방글라데시는 권고안을 하나 제시했다.

103. 벨라루스는 대한민국에 다양한 범위의 긍정적 발전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또한 제도적 문제들, 즉 여성 폭력, 성차별, 이주민 및 난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아동 체벌, 여성에 대한 노동착취 및 성적 착취, 인신 매매,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언급했다. 벨라루스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104. 벨기에는 2012-2016 제 2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양성평등에 대한 국가 보고서 발간 등을 환영했다. 그러나 사형수들의 운명에 우려를 표했으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벨기에는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105. 우즈베키스탄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갱신을 언급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인종차별, 종교의 자유 제한 및 인신 매매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106.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라고 발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해서 사형제도 폐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인 바, 공공 여론 및 법적 인식, 사회 현실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에서의 사형제도의 기능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어려운 상황이다.

107. 법무부는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 방안을 위한 부처간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인신매매의 효과적인 처벌과 그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 정부부처간 협력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포함해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입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예방,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팔레모 의정서)의 비준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108.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였다.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이나 착취, 임금 체불 등을 당했을 시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해당 사업장을 떠나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34 개소와 상담센터 1 개소를 설립, 운영 중이다.

109. 정부는 정책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이주민 자녀들의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오고 있다. 정부는 2010 년 10 월에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해, 부모의 체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초등, 중등교육을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법체류로 인해 건강보험이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도 외국인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110. 2013 년 7 월 「민법」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이므로,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제 21 조 (a)항에 대한 유보를 그때 철회할 계획이다.

111. 집회와 시위 시 발생된 폭력 행위 및 타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력 동원에 있어 국제 인권기준에 맞추어왔다. 법 집행에 있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 질서간의 조화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112. 취업여성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 확충, 보육비 지원,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유연 근무제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여성들도 기업 내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들을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는 취업에 있어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 월 1-7 일)을 지정했다. 또한 고용상의 양성 평등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113. 「군형법」 제 92 조의 5 항에 따라, 계간 및 추행죄는 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 건의 판결에서 상기 조항은 군대의 기강 및 전투력 유지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합헌이며, 막사 내에서 부대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위일 때만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상기 조항을 폐기 혹은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한편, 정부는 군내 동성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14. 아동 학대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들의 범위가 최근 확대되었다. 정부는 현재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이 법에 따르면 성인 대상 범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과 갇생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115. 아동 인권 모니터링 센터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할 NGO 가 선정되었다. 옴부즈맨과 옴부즈아동을 선정해 8 개 지역에서 아동 인권을 모니터링하고,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현행 법과 정책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법적 공식화를 통해 아동인권 모니터링 센터의 업무 안정화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중에 있다.

116. 정부는 주요 ILO 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 여론과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계속해서 비준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다.



117. 사회 내 성차별적 관념과 관행을 해결하려고 할 때 봉착하는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정부는 양성평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의 증진과, 교육,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는 2011년 9월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을 제정하여, 2012년 3월부터 성별영향평가는 국가가 입안하는 모든 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법률의 제정과 개정, 중장기 국가 정책의 개발에 적용되고 있다.

11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간 결혼 중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인신 매매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소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하였다.

119. 이주 자녀를 비롯해서 학교에서의 왕따 문제를 다루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함께 2012년 2월 '학교 왕따 퇴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120.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정부 보조금과 장학금, 소득 연계형 학자금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 계층 하위 70%에 속하는 학생들은 등록금의 25%까지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121.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을 초청하라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인권이사회의 모든 특별 절차들에게 상시 초청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인 점을 국가대표들이 상기하도록 하였다.

122.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서는, 2012년 8월부터 아동 보호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어 장애 아동들이 자기 집에서 보살핌을 받고, 교육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23. 대표단은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의견과 권고안들을 제시해준 회원국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부는 각국의 권고안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또한 상기 권고안들이 제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 II. 결론 및/또는 권고안

124. 다음 권고안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검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적어도 2013년 3월 제 22차 인권이사회 회기가 개최되기 전에는 답변을 제출할 것이다. 다음 권고안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은 제 22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결과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124.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하라. (아르헨티나);

124.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스페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서명 및 비준을 고려하라. (팔레스타인);

124.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스페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우선적으로 서명, 비준하고 그에 따른 전국적 예방 체제를 수립하라.(체코 공화국);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고문 혹은 굴욕적 대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국가 체제를

확립하라.(불가리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수용소 방문을 시행할 국가 체제를 확립하라.(코스타리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하라.(슬로베니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고려하는 과정을 신속히 완료하라.(튀니지);

124.4. 개인정보 절차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3 선택의정서」의 조기 비준을 고려하라.(슬로바키아);

124.5. 국내 사법처리과정에 따라 관련 협약, 특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할 것을 고려하라.(캄보디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하라.(필리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하라.(르완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해 법률 개정 가능성을 고려하라.(알제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하라.(모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하라.(수단);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라.(칠레);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포함, 모든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라.(인도네시아);

124.6.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비준하라.(스페인);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 가능성을 연구하라.(아르헨티나); 「강제 실종보호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라.(이라크);

124.7. 가사노동자의 적절한 노동에 관한 최근 ILO 협약 No. 189를 포함해서 ILO 주요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더 한층 기울이라.(필리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ILO 협약(협약 87);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ILO 협약(협약 98); 강제 노동에 관한 ILO 협약(협약 29); 강제 노동 철폐에 관한 ILO 협약(협약 105)을 비준하고 이행하라.(우루과이);

124.8. UNESCO 교육상 차별 금지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라.(이라크);

124.9.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라.(프랑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라.(온두라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라.(아일랜드);

124.10. 가입한 국제 인권 조약 중 나머지 유보 조항 (특히 「아동권리협약」, 「자유권규약」,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있어서)의 철회를 고려하라.(슬로베니아);

124.11. 「아동권리협약」 제 21 조 (a)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라.(독일); 「아동권리협약」 제 21 조(a) 항에 대한 유보를 없애라.(아일랜드);

124.12. 장애인의 생명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상법」 제 732 조를 개정하라.(코스타리카);

124.13. 「고문방지협약」 제 1 조에 따라 고문죄를 형법에 포함하라.(멕시코); 고문의 정의와 관련해 국내법을 「고문방지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과정을 조속히 완료하라.(튀니지);

124.14. 국가인권기구를 강화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라.(스페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증진 및 자원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튀니지); 인권보호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구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라.(호주);

124.15.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UPR 및 조약 기구들로부터 제시된 권고안의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축하라.(불가리아); 시민사회의 제안 사항들을 고려해 UPR 의 결과들을 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본 UPR 에서 제시된 권고안들의 이행에 대해 인권이사회에 중기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헝가리);

124.16. 고문문제 특별보고관을 초청하라.(벨라루스); 인종 차별, 종교와 신념의 자유 제한, 인신 매매 등의 분야에 있어서 해당 UN 인권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라.(우즈베키스탄);

124.17. 독립적 아동 인권 모니터링 기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아동 학대 및 가정 폭력 사례와 관련해 인권 교육에 더 노력하라.(이란);

124.18.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인권 소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하라.(팔레스타인);

124.19. 아동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전략을 이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적절한 자원을 배분하라.(말레이시아); 모든 분야에서의 아동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법률의 발전과 정책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적절한 체제를 확립하라.(오만);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일본); 아동, 특히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아동들을 위해 적절한 시설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대책을 마련하라.(이란);

124.20.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조항과의 완전한 조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남아프리카);

124.21. 소수 인종 및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를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라.(캐나다);

124.22. 여성과 여타 소외 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계속하라.(네팔);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 특히 국내 사법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라.(알제리);

124.23.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에 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인도네시아);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노력과 조치를 강화하라. (팔레스타인);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가속화하라.(칠레); 종합적 차별금지법안을 관련 국제 인권 조약에 부합하도록 제정하는 노력을 배가하라. (슬로베니아); 2008 년 5 월 폐기된 법안을 대체할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라.(차드); 차별금지법을 확실히 제정하라.(인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호주);

124.24.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까지를 반영하여 차별금지법을 우선적으로 제정하라.(체코 공화국);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 금지를 구체적으로 포함시켜라.(스페인);

124.25. 사법적 검토를 시행하여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팔레스타인); 종합적인 사법적 검토를 실시하여 법적, 실질적 양성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남아프리카);

124.26.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여 여성의 지위를 신장하고 여성 폭력 및 차별을 철폐하라.(중국); 정부 정책 내에 효과적 양성평등을 보장하라.(몰도바 공화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국가 기관 내에 여성의 지위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라.(오만); 여성, 특히 독신모들이, 남성과 똑같이 차별 없이 고용과 보수, 그리고 상속이나 이혼에 있어 동등한 결혼상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증진하라.(벨기에);

124.27. 가정 내 공동 책임에 대한 인식과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인식 제고를 고려하라.(폴란드);

124.28. 독신모 및 그 자녀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브라질); 독신모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의 차별 철폐를 위해 전국적인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하라.(멕시코); 독신모와 그 자녀들을 지원하고 상담해 줄 정부 기구를 설립하라.(독일);

124.29. 아동 등록제도를 개선해서 아동이 무국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라.(남아프리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고 법을 제정해서, 부모의 법적 신분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상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라.(노르웨이); 부모의 신분이나 국적과 별개로 출생시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등록제를 시행하라.(프랑스); 부모의 국적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출생 즉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하라.(아일랜드);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은 부모의 국적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라.(이탈리아); 부모의 이주 상황이나 국적과 별개로 모든 이가 출생과 동시에 등록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하라.(멕시코); 인신매매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출생시 민법상 등록이 되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하라.(루마니아); 사법적 검토를 실시하여 출생시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등록이 되도록 하되, 동시에 개인 정보 보호, 특히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하라. (스위스); 출생 등록제를 검토하여 미혼모와 그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라. (i) 부모의 법적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 이 확정되도록 할 것; (ii) 출생 등록시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히 표시할 것; (iii) 아동의 출생 등록이 입양 부모처럼 제 3 자에 의해 이루어져, 적절한 법적 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 입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한 아동이 인신매매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할 것(캐나다);

124.30.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의 퇴치와 방지 및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계속 시행하라.(쿠바);

124.31. 차별, 특히 여성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시행하라.(모로코);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학대를 퇴치하라.(스페인);

124.32. 여성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막고 그 자녀들이 교육권과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적합한 정책과 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라.(수단); 이주 여성과 아동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막고 그들에게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시행하라.(이란);

124.33.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한 모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할 가능성을 연구하라.(아르헨티나);

124.34. 군 내 성적 지향을 근거로 처벌하는 법률의 폐기 가능성을 연구하라.(미국);

124.35.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ICCPR-OP2) 비준을 고려하라.(르완다);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ICCPR-OP2 를 비준하라.(스위스);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ICCPR-OP2 비준을 고려하라.(슬로베니아);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지향하면서 사형제도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을 개정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ICCPR-OP2 를 비준하라.(우루과이); 1997 년 이래 시행된 적이 없는 사형집행에 대해 공식적인 유예 제도를 확립하라.(칠레); 현재의 사실상의 사형제도 유예를 공식적 유예로 전환하라.(독일); 사형집행의 사실상의 유예를 처형과 연도에 있어서 법률상의 유예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라.(스위스); 모든 처형을 유예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법률을 도입하라.(영국); 사형제도에 대한 사실상의 유예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라.(벨기에); 대한민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국제적 최소기준을 준수하라.(벨기에);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하라.(온두라스);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을 고려하라.(우즈베키스탄); 사형제도 폐지의 가능성을 고려하라.(이탈리아);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노르웨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현재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전환하라.(슬로바키아); 10 년 넘게 사실상 유예되어 온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완결하라.(터키); 법률상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프랑스);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라.(스페인);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ICCPR-OP2 를 비준하라.(호주);

124.36. 치안병력이 특히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해 과도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무력 사용을 방지할 체제를 마련하라.(폴란드);

124.37. 고문 및 부당한 처우를 방지할 조치를 강화하라.(체코 공화국); 경찰에 의한 모든 고문 의혹을 조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라.(벨라루스);

124.38. 체벌을 완전히 금지할 방안을 강구하라.(팔레스타인); 아동에 대한 잘못된 처우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을 전개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이러한 처벌에 대한 대안적 조치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훈육방식을 증진하라.(우루과이); 어떤 상황에서도 체벌을 분명히 금지하라.(헝가리);

124.39.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라.(몰도바 공화국);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여, 여성 경찰관의 숫자를 늘리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소와 재활 서비스를 개선하며, 관련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헝가리); 가정 폭력범이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부부 강간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라.(슬로바키아);

124.40. 아동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라.(이라크); 아동에 대한 폭력 금지를 위한 정부의 역량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라.(키르기스스탄); 아동에 대한 폭력 금지 방안을 강화 하라.(세네갈);

124.41.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보츠와나); 아동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더 엄격히 하라.(벨라루스);

124.42.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말레이시아); 인신매매 퇴치에 있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 목적을 동등하게 다루어 국내 및 국제 차원 모두 협력을 강화하라.(몰도바 공화국);

124.43.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의 예방과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팔레모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필리핀); 팔레모 의정서를 비준하라.(브라질); 팔레모 의정서를 비준하라.(네덜란드); 팔레모 의정서를 비준하라.(영국); 팔레모 의정서 가입과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초청 등을 통해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벨라루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해내고 보호할 보다 적극적 대책을 특히 팔레모 의정서 비준을 통해 강구하라.(벨기에);

124.44. 지뢰 피해자에게 심리사회적, 의학적, 경제적 보조 등의 지원을 제공할 방안과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고려하라.(태국);

124.45. 사법체제에 아동친화적 절차규정을 도입하라.(헝가리);

124.46. 법치와 사회적 결속 조성 노력을 지속하라.(베트남);

124.47. 국제입양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아동권리협약」에 완전히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십대 미혼모의 동의를 의무화하며, 모든 입양이 사법 감시 및 규제의 권한과 책임을 지닌 중앙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라.(온두라스); 국가입양센터를 설립하고 출생 직후 등록을 의무화하라.(독일);

124.48. 여성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여성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며,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일본); 노동 시장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남녀간의 지속적인 소득 격차를 극복하는 것을 포함해서 마련하라.(슬로베니아)

124.49. 직장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해당 법률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하라.(네덜란드);

124.50.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까지 포함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라.(일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 의무들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보장하라.(폴란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적용하라.(스위스);

124.51. 언론과 표현의 자유 행사를 보장하는 특별법을 도입하라.(남아프리카);

124.52.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전환하라.(스위스);

124.53.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현재의 법을 개정하여 군복무에 대한 대체복무가 민간적 성격을 갖추는 효과를 보도록 하고 이를 행정 당국의 감독하에 두도록 하라.(프랑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구금을 폐지하고, 비군사적인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라.(독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폴란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를 도입하라.(슬로바키아); 양심적 병역 거부를 권리로 인정하고, 군복무 대신 진정으로 민간적 성격의 지역사회복무로 대체하도록 하고, 현재 구금중인 모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석방하라.(스페인);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해 즉시 대체 군복무 옵션을 도입하고, 그것이 비전투적 혹은 민간적인 성격을 갖추도록 하고, 또한 징벌적 성격이 없도록 하라.(미국);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를 도입하라.(호주);

124.54. 사법 담당관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올바른 집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사, 구금, 기소 및 그로 인한 자기 검열의 분위기 조성을 막도록 하라.(미국);

124.55.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부당하게 체포되고 투옥된 통일 지지 애국자들을 석방하라.(북한);

124.56.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정기적으로 심의하여 인권 원칙들과 일치되도록 보장하라.(호주); 「국가보안법」 이행 양식을 특정화하여 동 법이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프랑스);

124.57. 「국가보안법」의 규정들을 더 명확히 정의하라.(독일); 자의적인 적용 및 법 해석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을 고려하라.(노르웨이); 「국가보안법」 적용 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도록 개정하라.(스페인); 「국가보안법」이 명확하여 남용적 해석이 불가능하게 되도록 개정하라.(미국); 형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북한);

124.58. 전 정치범 및 양심범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법」을 철폐하라.(북한);

124.59. 대한민국의 빈곤퇴치전략에 충분한 자금을 배정하라.(남아프리카);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로 인해 약화된 사회 통합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증대하라.(이란); 빈곤층에게 건강권과 주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혜택이 전체 인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중국);

124.6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특히 보건, 교육, 식량 분야에 있어서의 권리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대책을 지속하라.(쿠바); 양질의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특히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강화하라.(바레인);

124.61. 2018 년까지 저소득층에게 튼튼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라.(쿠웨이트)

124.62.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라.(쿠웨이트);

124.63. 계속 인상되는 등록금과 교육 수준을 맞추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이란);

124.64. 난민, 망명 신청자, 인도주의적 지위 보유자들에게 다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라.(보츠와나);

124.65. 이주 노동자들의 이동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프랑스);

124.66.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아일랜드);

124.67. 이주 노동자들, 특히 여성들에게,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포함해서, 모든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는 종합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강화하라.(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네팔); 이주민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이행하라.(세네갈);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조치를 지속하라.(스리랑카); 적절한 복지와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방안을 더욱 강화하라.(태국);

124.68. 난민, 이주 노동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 보호를 강화하라.(벨라루스);

124.69. 비정규 이주 문제를 온정적으로 다루고, 더 나아가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고려하라.(방글라데시);

124.70. 공적개발원조의 기본 원칙으로서 인권 증진과 보호에 초점을 둔 국제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라.(파라과이).

125.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결론 및/또는 권고안은 제출 국가(들) 및/또는 심의 대상 국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실무그룹 전체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부록

### 대표단 구성

길태기 법무부 차관이 단장을 맡은 대한민국 대표단은 다음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짐.

- 대체 수석대표: 최석영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 오승걸 학생자치과 과장 (교육과학기술부);
- 이경아 인권사회과 1 등 서기관(외교통상부);
- 봉 욱 인권국 국장 (법무부);
- 방기태 인권정책과 과장 (법무부);
- 홍관표 인권정책과 서기관 (법무부);
- 오유진 인권정책과 사무관 (법무부);
- 조인형 합동참모본부 법무실 법무관 (국방부);
- 서태우 인권담당관실 법무관 (국방부);
- 김학배 산업인력팀 사무관 (지식경제부);
- 방영식 복지정책과 사무관 (보건복지부);
- 박연서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 (보건복지부);
- 서정현 아동권리와 사무관 (보건복지부);
- 마성균 국제협력담당관 (고용노동부);
- 김태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고용노동부);
- 이진희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여성가족부);
- 박영수 법제과 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동진 법제과 사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오정택 개인정보보호윤리와 사무관/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 윤웅현 지역방송팀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 이준형 인권보호담당관실 경위 (경찰청);
- 권해룡 차석대사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 이주명 공사참사관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 김강립 공사참사관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 권순철 참사관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 이재완 참사관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 김종철 참사관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 이진수 1 등 서기관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 조기정 1 등 서기관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 통역: 김소영, 우주현, 정은지.
-

**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 Introduction

1.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of 18 June 2007, held its fourteenth session from 22 October to 5 November 2012.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held at the 8th meeting on 25 October 2012.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headed by H.E. Mr. GHIL Tae-Ki, Vice Minister, Ministry of Justice. At its 13th meeting held on 31 October 2012, the Working Group adopted the report on the Republic of Korea.

2. On 3 May 2012, the Human Rights Council selected the following group of rapporteurs (troika) to facilitate the review of Republic of Korea: Djibouti, Hungary, Indonesia.

3.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of the annex to resolution 5/1 and paragraph 5 of the annex to resolution 16/21, the following documents were issued for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a) A national report submitted/written present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a) (A/HRC/WG.6/14/KOR/1);

(b) A compilation prepared by OHCH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b) (A/HRC/WG.6/14/KOR/2);

(c) A summary prepared by OHCH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c) (A/HRC/WG.6/14/KOR/3 and A/HRC/WG.6/14/KOR/3/Corr.1 (English only)).

4. A list of questions prepared in advance by Czech Republic, Germany, Ireland, Mexico, Netherlands, Norway, Slovenia,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was transmitted to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troika. These questions are available on the extranet of the UPR.

## I. Summary of the proceedings of the review process

### A. Presentation by the State under review

5. The Republic of Korea achieved both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within a fifty year period and has continued its efforts to promote and protect the full scope of human rights. It has also given attention to promoting better the human rights of minorities and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so as to ensure that every member of society equally enjoyed universal human rights.

6. The delegation referred to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national report including consultations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relevant NGOs.

7. The results of the first UPR review were reported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Council (NHRPC) in 2008. Since 2010, annual examinations were carried ou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first review, primarily through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were reported to the NHRPC. The Government plans to further develop this system of follow-up after the second cycle of the UPR.

8. The NHRPC has responsibility for drafting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NAP). The second NAP was launched in March 2012 and includes 209 projects of the 24 ministries and agencie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During the drafting of the plan, the Government review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NHRCK) recommendations as well as thos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nd opinion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9. Regarding efforts to implement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the Government ratified the CRPD and withdrew its reservation to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o article 7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0. Republic of Korea has submitted its reports in accordance with the seven core human rights treaties ratified and earnestly responded to individual communications.

11. The 2012 *Refugee Act* will enter into force in July 2013. The Act is expected to put in place a fair and effective process of refugee recognition and improved refugee protection measures. The Centre for refugee support i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asylum seekers and refugees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12. Concerning anti-discrimination measures, there were approximately ninety individual pieces of legislation. Aside from these laws and in response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quests,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examine and review the need for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13. Regarding the right to security of the person, the *Habeas Corpus Act* has been enforced since June 2008.

14. The delegation referred to notable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establish policies for ensuring that marriage immigrants adjust well to the Republic of Korean society and that the children of these families receive all due protection and respect. In 2011 the revise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reinforced efforts concerning medical and health care as well as education support for marriage immigrants who suffered from domestic violence.

15. The delegation referred to increased demands and challeng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privacy.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rules have been set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both public and private spheres and standards have been set on personal information handling. Moreover, the Government reinforced corrective measures for damages caused by privacy rights violation. To prevent abus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the collection and usage of such numbers has been limited and provision of alternative measures for personal verification made mandatory. Efforts are being made to have public documents record the date of birth instead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16.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expanded, by the amendment of the *Public Election Act* election campaigns via telecommunication networks were allowed.

17. In the midst of increasing labor market flexibility, the Republic of Korea initiated and provided comprehensive measures to protect non-regular workers from discrimination.

18. For low-wage workers the Government has subsidized both individual employment insurance and the national pension premium. The scope of applicability for employment insurance was expanded to include the self-employed.

19. The right to form a trade union was better protected by introducing multiple trade unions in a workplace.

20.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for those in the lower-income bracket has been reinforced. Improvements to the residential environment development programme have been promoted to guarantee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21. There has been a gradual expansion of the protection of social security with the reasonable revisio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o accommodate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the lowering of eligibility conditions for benefits to allow more people in vulnerable groups to receive benefits.

22. The coverage of Universal national medical health insurance has steadily expanded its coverage from birth to the elderly. For some patients, such as those with rare and incurable diseases, the co-pay rate has been reduced. The Republic of Korea was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provide medical services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by reducing burdens on patients for medical cost of rare and incurable diseases and giving medical support for foreigners and their families.

23. With a rapidly aging population, the Government introduced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s in 2008 in order to relieve the burdens on families caring for the elderly and has also taken measures for patients with dementia.

24.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d promoted the Framework Policy for Migrants, which will be evaluated every five years to promote more comprehensive migrant policies. The second plan to be initiated in 2013 is aimed at expanding comprehensive services for immigrants to assist with their adjustment in society as well as to support the education for migrant children.

25. Foreign workers that entered the country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ere equally protected as citizens under various labor-related laws. Many services were provided to migrant workers such as interpretation, counseling and medical services. Female migrant workers were guaranteed equal access to the maternity protec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labour standards. In cases where women migrants were involved in the process of legal proceeding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even if the person were an illegal resident, deportation would be delayed and special stay was permitted.

26. The Republic of Korea was proud that it had become a model case as it moved from being an aid beneficiary to a donor and committed to increase its official development aid (ODA) volumes. In 2010,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as enacted and the Government intended to strongly consider human rights principles in the planning and carrying out of development projects.

## B. Interactive dialogue and responses by the State under review

27. During the interactive dialogue, 65 delegations made statements. Recommendations made during the dialogue are to be found in section II of the present report.

28. Botswana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for developments since their first review and referred to the withdrawal of reservation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development of policies in favou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otswana noted concerns raise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ver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Botswana made recommendations.

29. Brazil noted the accession by the Republic of Korea to CRPD and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and policies to support persons with disabilities. Brazil raised concerns over reports of social stigma and hardship faced by single mothers, which may lead mothers to relinquish their children. It hoped that the enactment of the 2011 Special Adoption Act will improve this situation. Brazil made recommendations.

30. Bulgaria noted substantive developments in the normative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nd the launching of the second 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t noted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investig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K) in March 2012 and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the OP-CAT. Bulgaria made recommendations.

31. Cambodia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on its achievements and welcomed the launching of the second 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2012-2016. It recognised efforts to address all remaining human rights challenges including human trafficking, rights of migrant workers, especially women, and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It made a recommendation.

32. Canada requested an update on steps taken with regard to the emphasis on women and children in migrant worker rights' policy, and the provision of training to law enforcement personnel. Canada positively noted court rulings recognising marital rape and expressed concern over reports of police taking domestic violence cases lightly. It raised concerns about HIV and drug testing for E2 visa non-citizens. It made recommendations.

33. Chad not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accepted the majority of the recommendations made in 2008 and that it is party to many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t welcomed the measures adopted in 2009 for follow-up to the UPR. It made a recommendation.

34. Chile valued the efforts made by the Republic of Korea to implement the UPR recommendations from 2008. It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high level standard of education. Chile asked about measures taken to address the highly competitive conditions prevalent in the education system, as raise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hile made recommendations.

35. China welcomed the National Action Plan 2012-2016. It appreciated effort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provide equal access to education as well as to guarantee rights of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raised concerns about serious gender inequality,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despread corporal punishment and abuse of children, rampant human trafficking, unprotected rights of non-regular workers, and access to health care for poor persons. China made recommendations.

36. Costa Rica appreciated the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from its first review under the universal periodic mechanism. It expressed concern at the discrimination of children of single women, the lack of criminalization of marital rape, domestic violence and the unequal division of assets in divorce cases. Costa Rica made recommendations.

37. Cuba welcomed plans for an Anti-Discrimination Law and asked whether the delegation could provide more information in this regard. It encouraged the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exploring avenues to overcome challenges identified for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the withdrawal of reservations, as well as with regard to the National Security Law. Cuba made recommendations.

38. Cyprus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commitment to human rights and noted that it is a party to the majority of core human rights instruments. It welcomed efforts taken towards the promotion of women's rights,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2011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 Act*. Cyprus asked about measures foreseen to facilitate social insurance maternity leave for female non-regular workers.

39. Czech Republic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PR process. It asked the Republic of Korea to elaborate more on the reasons for the slow progress in adopting a national Anti-discrimination Act. It welcomed the interes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ccede to the OP-CAT. The Czech Republic made recommendations.



40.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the National Security and Security Surveillance laws. It noted that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the main source of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Many violations of rights, includ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have been com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particular reference being made to its article 7. It made recommendations.

41. France welcomed the death penalty moratorium and commented on the establishment of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nd efforts to promote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It asked what concrete measures have been taken to protect migrant workers. It made recommendations.

42. Germany commended the activ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from the first UPR. It regrett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yet abolished the death penalty and expressed concern over long sentences against conscientious objectors and over the situation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Germany made recommendations.

43. Honduras highlighted the launching of the second 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for 2012-2016 and the incorporation in the Plan of the recommendations made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and from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mechanism. It also referred to important progress made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Honduras made recommendations.

44. Hungary noted steps taken towards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the protection of women. It requested information on measures to protect pregnant employees as well as to counter discrimination against single mothers. Hungary encouraged the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efforts to protect children from violence and abuse, and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before the next UPR cycle. Hungary made recommendations.

45. India welcomed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paragraph 3 of Article 9 of the CRC and the adoption of the Social Services and Gender Impact Assessment Acts. It hoped for adequate monitoring mechanisms to implement this legislation. India expressed concern over the delayed Anti-discrimination Bill. It made a recommendation.

46. Indonesia commended the expanded investigatory mandate of the NHRCK. It noted the formulation of the second Framework Policy on Immigration 2013-2017. It commended initiativ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t welcomed the enac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Act, expanded development assistance and enactment of the mid-term policy emphasising MDGs. Indonesia made recommendations.

47.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expressed concern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with particular regard to children's rights. It made recommendations.

48. Iraq appreciated measures taken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through the adoption of a national plan. It welcomed the Law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the promotion of a culture of respect for life. Iraq made recommendations.

49. Ireland noted the absence of a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may give rise to children being secretly adopted between their birth and registration. It noted the results of a 2010 survey, which estimated that there might be as many as 17,000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were unable to access to medical care and other services. Ireland made recommendations.

50. Italy acknowledged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It commended the *de facto* death penalty moratorium. It raised concerns over reports of inadequat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and of serious domestic violence problems. It noted measures to raise

awareness of the criminal nature of domestic violence and to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and requested further information. It made recommendations.

51. Japan welcomed the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the introduction of legal provisions to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and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Japan pointed out gaps in guaranteeing children's rights, including issues related to the trafficking in children and violence against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Japan made recommendations.

52. Responding to questions raised, the delegation stated that the need to establish regulations in the *Criminal Act* regarding the definition of torture as stipulated by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ther than these already provided for in established laws, will be carefully considered. The Government is currently reviewing national laws and systems for possible discrepancies between the OP-CAT and national laws. With the NHRCK already carrying out inspections of detention and protection facilities, the prevention effect that is intended in the Optional Protocol has already been achieved to a significant extent.

53. 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includes preparing for the enactment of a general anti-discrimination act. The Government will fully consider including in it grounds for discrimination such as sexual orientation, and indirect discrimination.

54. Given the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has been emphasized. The revision or abol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would require public consensus. The Government was strictly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law to prevent the *National Security Act* from being abused or arbitrarily interpreted. Article 7 of the Act did not apply to those who simply praised or supported the claims of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Therefore, the law cannot be seen to be violating the fundamentals of academic freedom or freedom of expression. The average number of persons detained f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each year in the last five years steadily remained at around 20.

55. Regarding birth registration and adoption, the law was changed in 2008 so that an adopted child would enjoy the same rights and status as a biological child, and the problems in the past of registering a birth rather than an adoption were mostly corrected. Legal controls were also strengthened. Adoptions can only take place with a court permit.

56.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2008 in order to counteract sexual violence crimes, as well as the '*Countermeasures for Prevention of Recurrence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Support for Victims*' in 2009, and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in 2011.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gainst the disabled and children and juveniles was also strengthened and the statutory limitation suspended until a minor victim reached the legal age of majority. The government also continued to provide education and public campaigns with a view to raising awareness of the serious nature of damages caused by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57. The National Police Agency established a 'task force to counter child pornography,' and strengthened control over the making, dissemination or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58. 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vide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decision criteria for violations may vary according to available resources of individual states, ratification of their optional protocols requires more considered deliberation.

59. Ratification of ICRMW will be carefully examined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y's labor market and the need for social consensus.

60. The Government has been making thorough preparation for accession to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Child Adoption. For instance, international adoption previously overseen by private adoption agencies will now be overseen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will also monitor closely the recently launched 'court permit system', prior to ratifying the Hague Convention.

61. Under the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Act*, support for childcare, education, and living subsidies are provided. For low-income single mothers under the age of 24 there are self-support and employment package programmes with counseling and training to enable the families to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and viable. Moreover, relevant laws and school regulations have been amended to help teenage parents stay in school.

62.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2011, the Government completely banned any forms of corporal punishment. The *Child Welfare Act* has been amended as of August 5<sup>th</sup> 2012 to strengthen the ban on corporal punishment in child welfare facilities and at homes.

63. To reduce the gap in educational levels between different regions, comprehensive support is being provided for students in disadvantaged areas. The Government was diversifying the forms of high schools. It was also expanding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which evaluates a student's aptitudes and skills rather than simply comparing exam scores for college admission, with a goal to alleviate excessive competition. The Government had tightened regulations on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64. Given the special security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ystem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could be considered when there are positive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as well as the security landscape, and when there is a national social consensus for accepting such an alternative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lause in the *Military Service Act* was constitutional. An amendment bill to the *Military Service Act* to introduce th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s was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was discarded.

65. Kuwait appreciated the positive steps taken with regard to the second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It commended the expansion of competences for the NHRI and other positiv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s since the first review. Kuwait made recommendations.

66. Kyrgyzstan welcomed the expanded scope of the NHRCK and the withdrawn reservations to human rights instruments. It appreci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victims' support fund and the enactment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 Act*. It particularly commended the provision of scholarships for the most disadvantaged students. It made a recommendation.

67.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mmended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xpanded development assistance to promote human rights, and achievement of MDGs. It noted the Republic of Korea's accession to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CRPD and encouraged continued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68. Malaysia welcomed measures taken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Malaysia was encouraged by the launching of 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and the expanded investigatory scope of the NHRCK. Malaysia welcomed the Republic of Korea's promotion of humanitarianism in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mes. It made recommendations.

69. Mexico praised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progress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t further recognized efforts for the ratification of the CPED, OP-CAT and the ICRMW, and hop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able to remove the challenges that hinder the ratification of these instruments. Mexico made recommendations.

70. Morocco commended progress in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It welcomed the good practices contained in the national report. It commended progress in the protection of health, social, education and employment rights. It welcomed the 2008 ratification of CRPD. It welcomed specific measures for social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made recommendations.

71. Nepal commended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and the adoption of measures to monitor its implementation and the UPR follow-up actions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Council. Nepal noted the important enactment of the 2010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 made recommendations.

72. The Netherlands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s efforts to integrate a human rights perspective in its policies. It hop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soon abolish the death penalty. It noted concerns expressed by the CEDAW Committee about disadvantages faced by women in the employment sector and the concerns from the CESCRC on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t made recommendations.

73. Norway remained concern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lacks sufficient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unwed mothers, of children and of persons affected by the National Security Law. Norway remained concerned about the increased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Norway was encouraged by the *de facto*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It made recommendations.

74. Oman not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d taken up commitment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on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t made recommendations.

75. Palestine noted measures taken to guarantee the right to education for all children and encouraged the Republic of Korea to take additional efforts to review its educational policies with a view to alleviating the level of pressure to which children are subjected. It noted the continuation of efforts in putting forward an anti-discrimination law. Palestine made recommendations.

76. Paraguay recognized important efforts,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launching of the second 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2012-2016. It also noted progress made with regard to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araguay made a recommendation.

77. The Philippines welcomed the Republic of Korea's enactment of legislation enhancing human rights' promotion, protection and fulfilment of its people, its ratification of CRPD, and that it had been a good host to thousands of Filipino and other migrant workers. The Philippines encouraged the Republic of Korea to enact further laws to protect the, as yet, unprotected rights of migrant workers. It made recommendations.

78. Poland welcome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ction Plan and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Council. Poland noted that issues requiring atten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ncluded protection of women agains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The unresolved issue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lso attracted Poland's attention. It made recommendations.

79. The Republic of Moldova noted with satisfaction the enactment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 Act*, aimed at ensuring effective gender equality in Government policies. It also acknowledged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prevent and prosecute domestic violence and ensure protection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t noted

with satisfaction the strong commitment to fight against human trafficking. It made recommendations.

80. Romania commended progress in protecting refugees and asylum seekers, and extensive steps to ensure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or all members of society. Steps undertaken so far and the Republic of Korea's commitments clearly show the political will to ensur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t made a recommendation.

81. Rwanda noted with satisfaction the impressive and significant efforts in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previous review. It welcomed adoption of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cognising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fulfilling gender equality and promoting humanitarianism as fundamental principles of development assistance. It made recommendations.

82. Senegal noted that the National Report quoted several initiatives such as: publication of the second action plan on protecting and promoting human rights; broadening the scope of compet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legislative measures for protecting children against sexual abuse and strengthening access to education for disabled children and those from disadvantaged families. It made recommendations.

83. Slovakia welcomed the Republic of Korea's adoption of 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and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ipulating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fulfilling gender equality and promoting humanitarianism as fundamental principles of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t made recommendations.

84. Slovenia welcomed the fact that since the first cycle of the UPR, the Republic of Korea ratified the CRPD and withdrew one of the reservations to the CRC. However, several human rights instruments remained non-ratified and several reservations remained. Slovenia was concerned about report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asked whether any awareness raising campaign is planned in this connection. Slovenia made recommendations.

85. South Africa noted progress made, particularly in the promulgation of laws aimed at enhancing the practical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t asked about measures to ensure the early consideration and promulga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It expressed concern abou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ir inadequate representation in decision-making positions. It made recommendations.

86. Spain congratulate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launching of its second 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celebrated the *de facto* moratorium in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since 1997. Spain made recommendations.

87. Sri Lanka commended progress in promoting and protecting children's rights and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equity. It also commended the efforts to address work-related grievances of migrant workers and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n their rights, through establishment of a counselling centre and support centres for workers' assistance and advice. It made a recommendation.

88. Sudan appreciated efforts to ensure the right to educ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in the area of education, including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t enquired about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guarantee education for all, including migrants. Sudan highlighted challenge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vulnerable groups, including women migrant workers, who suffered from violence and discrimination. It made recommendations.

89. Switzerland commended the *de facto* death penalty moratorium, which has been established for many years. It would seem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subjected legislative provisions on freedom of opinion and of the press to more restrictive

interpretations since 2008. Switzerland noted deficiencies in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It made recommendations.

90. Thailand commended establishment,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f Emergency Support Centres for foreign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dditional interpreters will hopefully be provided at these centres. Thailand noted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migrant worker welfare, but was concerned with the withholding of travel documents and involuntary relocation, subjecting migrant workers to unfair treatment. It made recommendations.

91. Timor-Leste asked how the Republic of Korea viewed the risk of entrenching differentiation between women and men, instead of promoting employment equality, of the policy of creating jobs tailored to women. Noting that two anti-discrimination draft bills submitted to the 18<sup>th</sup> National Assembly expired at the end of its term, it asked if their processing has been rescheduled.

92. Tunisia noted measures to guarantee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including those from less favoured backgrounds and disabled children. It also noted initiatives against domestic violence and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and migrants. It encouraged the Republic of Korea to adopt a general anti-discrimination law. It commended the adoption of Framework legisl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It made recommendations.

93. Turkey commended the launching of the second 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2012. It encouraged the Republic of Korea's human rights effort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me. It drew attention to the endeavour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xpand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urkey made a recommendation.

94.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rged the Republic of Korea to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CAT and asked if it would be willing to set a timeline for ratifying it. It was concerned tha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still permitted. It urged the Republic of Korea to br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t made recommendations.

95.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t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but remained concerned that it is vague and, in some cases, restricts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internet freedom. It was also concern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provide alternatives to military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t made recommendations.

96. Uruguay highlighted the launching of the second 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withdrawal of some reservation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he enactment of Habeas Corpus Act, the presentation of due reports to treaty monitoring bodies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Uruguay made recommendations.

97. Viet Nam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s progress in ensuring a better life for its citizens, the concrete steps taken in strengthening the domestic legal system and in improving social welfare. While referring to shared difficulties encountered in ensuring the rights of vulnerable groups, Viet Nam noted the considerable contribution of migrant workers to the country's economic and social dynamism. It made recommendations.

98. Algeria noted 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2012-2016. It was concerned about migrant workers, for whom advisory support centres have been established. It welcomed ratification of CRPD. It noted with satisfaction the efforts in promoting the rights of children and the elderly and realizing the rights to health, education and housing. It made recommendations.



99. Argentina congratulated the Republic of Korea for launching the second 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2012-2016 and the enactment of the Habeas Corpus Act and the Refugee Act. Argentina made recommendations.

100. Australia noted that the death penalty remains applicable and that no formal moratorium has been decided. It encouraged Republic of Korea to reach a social consensus for abolition. It noted that there remains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men's and women's salaries and that there is no broad anti-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legislation protecting homosexual, bisexual and transgender social groups. It made recommendations.

101. Bahrain appreciated efforts to guarantee the right to education for all children, with special attention being paid to children of low income familie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It wished to receive more information on ways and means to meet th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made a recommendation.

102. Bangladesh took positive note of amendment to various law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It welcomed further amendments to Immigration Control Act and hoped that these will encourage migrants to seek remedies to which they are entitled. It recognised noteworthy progress in addressing migrant exploitation. It made a recommendation.

103. Belarus noted the broad range of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it also noted systemic problems, including in regard to: violence against women, gender discrimination, legislative and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s and refugees,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labour and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and human trafficking as well as excessive force against workers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t made recommendations.

104. Belgium welcomed 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on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2012-2016, and publication of national report on gender equality. It remained concerned about the fate of prisoners on death row. It pleaded for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t made recommendations.

105. Uzbekistan noted the Republic of Korea's effort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women's and children's rights and the renewal of its National Programme. Uzbekistan noted concerns involving racial discrimination, restriction of freedom of religion and human trafficking. It made recommendations.

106. The Republic of Korea is a *de facto* abolitionist state.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examine carefully the need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taking into consideration such factors as public opinion and legal perception, social realities as well as the function of the death penalty in criminal policy. Currently, it is difficult to ratify the ICCPR-OP2, which provides for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107. The Ministry of Justice holds the annual inter-agency meeting on countermeasures to prevent and eliminate human trafficking and is strengthening coope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government agencies for the effective punishment and understanding of human trafficking trends. The Government has put forward 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Act* which contains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The amendment is 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atification process of the Palermo Protocol will be carried out as soon as legislative procedures are completed.

108.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business sites which employ foreign workers. In cases of discrimination, exploitation or delay in payment, the foreign worker can leave the site of employment and go to a different employment without any restric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d operates thirty-four support centers and a counseling center for foreign workers.

109. The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and taking a special interest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migrant children in terms of policy-making. The Government revised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 December 2010 to allow any child to receive fre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up to middle school regardless of the parents' status of stay. Children of foreign workers who are not eligible for legal medical assurance services such as health insurance or medical benefits due to illegal stay are also granted medical support through the medical services support project for foreign workers and the marginalized class.

110. When the revised *Civil Act* takes effect in July 2013, the Government plans to withdraw the reservation to Article 21 (a) of the CRC.

111. Regarding acts of violence and acts to obstruct other persons' rights during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e police force was mobilized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s for police officers who have used excessive force in law enforcement, the case is investigated thoroughly.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harmonize the rights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public order.

112. To reduce disadvantages faced by women in employment, the Government is promoting childcare leave, providing childcare support and expanding the flexible work system to prevent career breaks caused by child-bearing and child-rearing. Equally, it is implementing affirmative actions to help women make their way up the corporate ladder. The Government designated the "Equal Employment Promotion Week" (1-7 April) to raise public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It also awarded a prize to those who made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equal employment.

113. According to Article 92-5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sodomy and sexual molestation acts are punishe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wo occasions decided that such a provision was constitutional considering that it was meant for military discipline and sustenance of combat capabilities and only valid in case of an act taking place between militants within a barrack. Therefore, it is inappropriate to repeal or revise such a provision at this point.

114. The scope of those with the duty to report child abuse has recently been expanded. The Government is working on enacting an *Act on Special cases of Punishment for Child Abuse Crimes*, according to which the perpetrator will be subject to stricter punishment and reformation rules than when targeting adults.

115. A Korean NGO has been consigned with the operation of the Monitoring Center for Children's rights. Ombudspersons and Ombudskids for Children's rights are appointed to monitor children's rights in eight areas and provide inputs on possible institutional improvements regarding current laws and policies that violate children's rights. The Government is working on stabilizing the operation of the Monitoring Center for Children's rights by law.

116.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reviewed the feasibility of the ratification of the core ILO conventions. The harmonization of regulations would be required for the ratification of the ILO Convention for domestic workers.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work on their ratific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public opinion and circumstances.

117. Recognizing challenges to tackle gender discriminatory ideas and practices in society,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work to promote a deeper understanding about gender equality, and to improve gender discriminatory practices in daily lives through education, promotion and campaigns.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 Act* in September 2011, and starting from March 2012,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s applied to the drafting and amendment of the laws and the



development of mid-to long-term national policies, as a critical component of formulation of all policies formulated at the national level.

118. The *Act on Management of Marriage Brokerage Agency* was amended to reinforce control on inter country marriage brokerages and to strengthen the visa issuance process for these agencies to eliminate any potential elements of human trafficking.

119. To tackle the problem of school bullying, including of migrant children, relevant ministries joined together and came up with the "Comprehensive Plan to Eliminate School Bullying" in February 2012.

120. To relieve the tuition burden, the Government established national grants and scholarships as well as the Income Contingent Loan (ICL) system. Students in the bottom 70% of income bracket received financial support that amounts to 25% of their tuition.

121. Regarding recommendations to invite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trafficking, among others, delegates were reminded that a standing invitation has been extended to all Special Procedures of Human Rights Council.

122. With regard to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starting August 2012, child 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are being provided so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can be cared for in their homes and also education is provided free of charge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123. The delegation expressed appreciation to member states in preparing their evaluation of and recommend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will conduct a thorough review of those recommendations. The delegation will also push for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dialogue to be reflected in the Second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 II.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124.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ill be examined by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ill provide responses in due time, but no later than the 22<sup>nd</sup>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 March 2012. The respons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se recommendations will be included in the outcome report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at its 22<sup>nd</sup> session in March 2012.**

124.1. **Put Study the possibility of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CRMW),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OP2)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Optional Protocol to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P-CAT) (Argentina);**

124.2.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P-ICESCR) (Spain); Consider signing and ratifying OP-ICESCR (Palestine);**

124.3. **Ratify OP-CAT (Spain); Sign and ratify OP-CAT as a matter of priority and found the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accordingly (Czech Republic); Accede to OP-CAT and establish an effective national mechanism to prevent torture or degrading treatment (Bulgaria); Adhere to OP-CAT and consequently establish a national mechanism responsible to conduct visits to detention centres (Costa Rica); Consider ratifying OP-CAT (Slovenia); Rapidly complete the process of considering ratifying OP-CAT (Tunisia);**

124.4. Consider an early ratification of the third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 procedure (OP-CRC-IC) (Slovakia);

124.5. Further consider acceding to the relevant Conventions, especially the ICRMW in line with its domestic legislative process (Cambodia); Consider ratifying the ICRMW (Philippines); Consider ratifying ICRMW (Rwanda);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dapting national legislation in order to allow for the ratification of ICRMW (Algeria); Consider acceding to the ICRMW (Morocco); Accede to ICRMW (Sudan); Ratify the ICRMW (Chile); Ratify the ICRMW, in order to better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including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donesia);

124.6.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CPED) (Spain); Study the possibility of ratifying the CPED (Argentina); Sign and ratify the CPED (Iraq);

124.7. Continue to exert its utmost efforts to ratify ILO core Conventions, including the recent ILO C. No 189 on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Philippines); Ratify and implement the ILO Convention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87); ILO Convent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Right to Organise and to Bargain Collectively (Convention 98); ILO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Convention 29); and ILO Convention concerning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05) (Uruguay);

124.8. Sign and ratify the UNESCO Convention on Discrimination in Education (Iraq);

124.9. Adhere to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France); Ratify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Honduras); Accede to the Hagu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Ireland);

124.10. Consider withdrawing the remaining reservation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it is a party (namely to the CRC, ICCPR, OP-CRC-SC, CEDAW) (Slovenia);

124.11. Withdraw its reservations on Article 21(a)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rmany); Lift its reservation to article 21 (a) of the CRC (Ireland);

124.12. Amend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Law that restricts the po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obtain life insurance (Costa Rica);

124.13. Include in the Penal Code the crime of torture, in line with article 1 of CAT (Mexico); rapidly complete the process of harmonizing national legislation with CAT with respect to the definition of torture (Tunisia);

124.14. Strengthen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trengthen its independence (Spain); Continue its efforts to provid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ith more independence and resources (Tunisia); Take steps to ensure that bodies entrusted with overseeing the protection of rights, such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re fully mandated and resourced (Australia);

124.15. Establish a channel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in the work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from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nd treaty bodies (Bulgaria); Incorporate the results of the UPR into its current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taking into account the proposals of the civil society and present a mid-term evaluation report to the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is UPR (Hungary);

124.16. Extend an invit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Belarus);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UN human rights mechanisms in areas such as racial discrimination, th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human trafficking (Uzbekistan);

124.17. Take necessary actions to define the legal status for an independent child rights monitoring body and increase its efforts for human rights training relevant to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cases (Iran (Islamic Republic of));

124.18. Consider establishing a child rights sub-commission within the Kore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alestine);

124.19. Continue giving priority and allocating adequate resour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strategi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Malaysia); Take measures and establish appropriate mechanisms to enable the development of legislation and promotion of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all areas (Oman); Continue to further its efforts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 child (Japan); Take legal measures to provide appropriate facilities and support for children, particularly children with disabilities as the most vulnerable group of children (Iran (Islamic Republic of));

124.20. Take measures to ensure the full harmoniz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South Africa);

124.21. Work towards passing legislation that provides ethnic minorities and vulnerable groups, including wom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and legal recourse for victims of discrimination (Canada);

124.22. Take continuous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and other marginalized groups (Nepal); Intensify the efforts aimed at fight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especially by strengthening the national legislative framework (Algeria);

124.23. Continue its ongoing efforts to arrive at a national consensus on a general act on anti-discrimination (Indonesia); Strengthen efforts and take measures towards adoption of the law to fight discrimination (Palestine); Accelerate efforts to adopt an Anti-Discrimination Law (Chile); Step up efforts to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Bill in line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Slovenia); Adopt an anti-discrimination law to replace the law that was suspended in May 2008 (Chad); Ensure the passage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India); Adopt a comprehensive and broad-based anti-discrimination law (Australia);

124.24. Adopt the Anti-discrimination Act as a matter of priority while encompassing also grounds for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Czech Republic); Include in the Anti-discrimination Law a specific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Spain);

124.25. Continue the legislative review with a view to ensuring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n law and practice in all areas of life (Palestine); Undertake a comprehensive review of legislation with a view to ensuring de jure and de facto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South Africa);

124.26. Formulate a national strategy to promote gender equality so as to advance the status of women, combat violence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hina); Further ensure effective gender equality into government policies (Republic of Moldova); Take additional measures aimed at eliminat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at strengthening their situation and participation in all State institutions (Oman); Increase governmental efforts to ensure that women, in particular single mothers, can have access, as men do,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employment, equal pay and matrimonial rights, especially following an inheritance or a divorce (Belgium);

124.27. Consider undertaking educational and awareness-raising actions promoting co-responsibility in the domestic sphere and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Poland);

124.28. Combat discrimination against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Brazil); Conduct national awareness campaigns to eradicate the discrimination against single mothers, in law and in practice (Mexico); Establish a governmental authority to support and advise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Germany);

124.29. Improve the registration of children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the statelessness of children is prevented (South Africa); Revise the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law and introduce legislation to ensure that all children are automatically and legally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regardless of parents' legal status and origin (Norway);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a birth registration system to allow immediate registration at birth, independently of the status or nationality of parents (France); Provide for a full system of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including immediate registration upon birth regardless of the parent's nationality or status in the country (Ireland); Consider the possibility to introduce a system of automatic registration of children born in the country, regardless of the parents' nationality or status (Italy); Revise the national legislation with a view to guarantee that all persons are registered at birth, independently of their migrant condition or the nationality of their parents (Mexico); Enact measures regarding the civil registration of children at birth in order to fight the possible traffic in human beings (Romania); Carry out a legislative review so as to ensure an automatic and legal registration at birth, while guarantee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especially the right to access such data (Switzerland); Review its birth registration system to safeguard the human rights of unwed mothers and children by (i) ensuring immediate birth registration is available to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 parents legal status; (ii) ensuring that the birth registration accurately indicates the biological parent(s) of the child; and (iii) taking steps to prevent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by third parties, such as adoptive parents, that could result in the occurrence of de facto adoptions in the absence of proper judicial oversight, which could also put children at risk of being trafficked (Canada);

124.30. Continue implementing measures to combat and preven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and to guarantee equality of opportunities (Cuba);

124.31. Continue implementing policies aimed at intensifying the combat against discrimination, especially with respect to female migrant workers (Morocco); Figh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abuse of migrant workers, particularly women (Spain);

124.32. Continue to adopt appropriate policies and laws to counter discrimination of women migrant workers and ensure that their children can enjoy rights to education and health (Sudan); Take further legislative measures to formulate policies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migrant women and child workers and also guarantee their right to education and health (Iran (Islamic Republic of));

124.33. Study the possibility of intensifying measures aiming at eliminating all discriminatory treatment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Argentina);

124.34. Review the possibility of repealing laws that criminalize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within the military (United States of America);

124.35. Consider ratifying ICCPR-OP2,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Rwanda); Ratify ICCPR-OP2,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witzerland); Consider ratifying the ICCPR-OP2,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lovenia); Modify the penal provisions that provide for the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with a view to a total prohibition and ratify ICCPR-OP2,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Uruguay); Consider the possible establishment of an official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since it is not applied since 1997 (Chile); Convert the present de facto moratorium on executions into a formal moratorium (Germany); Take concrete measures in order to transform the de facto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into a de jure moratorium on execution and sentencing (Switzerland); Introduce a moratorium on all executions and introduce legislat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United Kingdom); Maintain effectively the de facto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Belgium); Respect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s on the death penalty, if the Republic of Korea will maintain it (Belgium); Consider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Honduras);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y the law (Uzbekistan);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ossibility of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Italy); Take steps towards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Norway); Take steps towards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while commuting the existing sentences to life imprisonment terms (Slovakia); Complete the legislative process in order to abolish capital punishment, which as a matter of fact, has been suspended for more than a decade (Turkey); Take all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abolish de jure the death penalty (France); Abolish definitively the death penalty (Spain); Abolish the death penalty and ratify ICCPR-OP 2 (Australia);

124.36. Consider establishing mechanisms preventing security forces from using force in an excessive or unjustified manner, especially against peaceful protesters (Poland);

124.37. Further strengthen measures against torture and ill-treatment (Czech Republic); Investigate all allegations of torture by the police and prosecute the perpetrators (Belarus);

124.38. Consider establishing the total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Palestine); Carry out public awareness campaigns on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ill-treatment of children to promote positive and non-

violent forms of discipline in schools and at home as alternative measures to these punishments (Uruguay); Express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all settings (Hungary);

124.39. Continue its efforts to prevent and combat domestic violence (Republic of Moldova); Enhance protec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hiring more female police inspectors, improving shelter and rehabilitation services for victims and strengthening data protection in this regard (Hungary); Ensure that domestic violence is properly punished and victims, including those of marital rape, are properly protected (Slovakia);

124.40. Take all procedures to prevent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women (Iraq); Continue strengthening its capacity and its efforts to combat violence against children (Kyrgyzstan); Strengthen measures to combat violence against children (Senegal);

124.41.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make more efforts to effectively prosecute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Botswana); Tighte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crimes related to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Belarus);

124.42. Step up its efforts to address the issue of trafficking of women and children (Malaysia); Strengthen the cooperation both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fighting against human trafficking equally for the purposes of sexual exploitation and forced labour (Republic of Moldova);

124.43. Consider stepping up its efforts towards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Palermo Protocol) (Philippines); Ratify the Palermo Protocol (Brazil); Ratify the Palermo Protocol (The Netherlands); Ratify the Palermo Protocol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ake comprehensive measures in combatting trafficking in persons including by the accession to the Palermo Protocol and by extending an invit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Belarus); Take more proactive measures to identify and look after victims of human sex trafficking, especially by ratifying the Palermo Protocol (Belgium);

124.44. Give consider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and programmes to provide assistance to landmine victims such as psycho-social, medical and financial support (Thailand);

124.45. Adopt child friendly procedural rules in the justice system (Hungary);

124.46. Continue its endeavours in fostering the rule of law and social cohesion (Viet Nam);

124.47. Continue the review of its international adoption system with a view to reform relevant legislation, and to bring it fully in line with the CRC; make the consent of teenage single mothers in the process mandatory; and adopt measures for all adoptions to be subject to the approval of a central authority with a clear mandate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judicial supervision and the regulation (Honduras); Establish a national adoption centre and an obligation to register right after birth (Germany);

124.48. Continue efforts to increase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mprove the employment situation for women and to promote women's rights (Japan);

Take effective measures against disadvantages faced by women in the labour market, including to overcome the persisting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Slovenia);

124.49. Implement legislation criminalizing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set up mechanism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legislation (The Netherlands);

124.50. Take further actions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ncluding opinion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positions of the Government (Japan);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Poland); Ensure that law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the press are applied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witzerland);

124.51. Adopt specific legislation to guarantee the exercise of the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South Africa);

124.52. Transfer the functions of the Korean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to an independent commission (Switzerland);

124.53. With regard to conscientious objection, adapt existing national legislation so that alternative services to military service effectively have a civil nature and that they are placed under the monitoring of civil authorities (France); Abolish imprisonment and establish a non-military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Germany); Ensure that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observed (Poland); 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lovakia);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as a right, guaranteeing an alternative community service to the military service of a truly civilian character, and free all conscientious objectors currently imprisoned (Spain); Immediately introduce an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option for conscientious objectors, ensuring it has a non-combatant or civilian character and is not of a punitive nature (United States of America);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ustralia);

124.54. Provide training to law enforcement officers on proper enforce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avoid investigations, detentions, and charges that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nd result in a climate of self-censorship (United States of America);

124.55. Release all persons including pro-reunification patriots who were unjustly arrested and imprisoned according to the “National Security La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24.56. Review regularly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to ensure its consistency with human rights principles (Australia); Specify modal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so that this law cannot be used against freedoms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France);

124.57. Define more clearly the regul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Germany); Consider amend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prevent arbitrary application and abusive interpretation of the law (Norway); Amend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guarantee that its application respects fully the freedom of expression (Spain); Amend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provide clarity and prevent abusive interpretations of the law (United States of



America); Abolish the criminal laws as the “National Security La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24.58. Abolish the “Security Surveillance Law”, which restricts freedoms of former political prisoners and prisoners of conscienc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24.59. Allocate sufficient funding to the poverty eradication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Africa); Increase its efforts to expand protection and support for low-income groups to solve weakening social integration due to intensifying income polarization (Iran (Islamic Republic of)); Strengthen its social security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poor population the right to health care and housing so that the results of economic development will benefit the entire population (China);

124.60. Continue programmes and actions to promote and protec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particular in the area of health, education and food (Cuba); Continue efforts to strengthen access to quality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especially for the vulnerable segments of society (Bahrain);

124.61. Continue to implement the “Bogumjari Housing” project which ensures solid and affordable housing to low income families by 2018 (Kuwait);

124.62. Continue to expand the framework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so as to guarantee the right to health (Kuwait);

124.63.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concile growing tuition fees with the level of education (Iran (Islamic Republic of));

124.64. Promote the local integration of refugees, asylum seekers, and humanitarian status holders by extending multi-cultural programmes to them (Botswana);

124.65. Take all measures to eliminate restrictions to the mobility of migrant workers (France);

124.66.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children of undocumented migrants are provided with access to medical services (Ireland);

124.67. Intensify its comprehensive policies and concrete plans to guarantee the full enjoyment of rights and welfare of migrant workers, especially women, including combating human trafficking and discrimination in all forms (Viet Nam); Continue its effort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Nepal); Carry out actions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s and their families (Senegal); Continue to take measure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Sri Lanka); Further strengthen measure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by ensuring their appropriate welfare and standard of living (Thailand);

124.68. Strengthen measures aimed at social protection of refugees,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Belarus);

124.69. Deal with the issue of irregular migration sympathetically and consider further legislative protection of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Bangladesh);

124.70. Continue strengthening the mechanism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 focus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araguay).



125. All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report reflect the position of the submitting State(s) and/or the State under review. They should not be construed as endorsed by the Working Group as a whole.

## Annex

### Composition of the delegation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headed by H.E. Mr. GHIL Tae-Ki, Vice Minister, Ministry of Justice and composed of the following members:

- Alternate: H.E. Mr. CHOI, Seok-young, Ambassador, Permanent Representativ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 Mr. OH Seung-Keol, Director, Student Governance Divisio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Ms. LEE Kyung-ah, First Secretary,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Mr. BONG Wook, Director-General, Human Rights Bureau (Ministry of Justice);
- Mr. BANG Kitae, Director,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r. HONG Kwan-Pyo, Senior Deputy Director,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s. OH Yoojin, Deputy Director,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r. CHO In Hyoung, Deputy staff Judge advocate, Office of Staff Judge Advocate, Joint Chiefs of Staf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Mr. SEO tae woo, Judge advocate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Human Rights Divisio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Mr. KIM Hak Bae, Deputy Director, Workforce Development Division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Mr. BANG Young Sik, Deputy Director, Division of Welfare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s. PARK Youn Seo, Deputy Director, Division of Child Welfare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s. SEO Jung Hyun, Deputy Director, Division of Child Righ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r. MA Sung Kyun, Director, International Labor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Ms. KIM Tae Eun,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Labor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Ms. LEE Jin Hee,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Mr. BAK Yeongsoo, Director, Legal Affairs Divisio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Mr. CHO Dongjin, Deputy Director, Legal Affairs Divisio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Mr. OH Jeong Taek, Deputy Director / Attorney at Law, Network Ethics Team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Ms. YUN Wung Hyun, Deputy Director, Regional Broadcasting Team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Mr. LEE Jun Hyung, Inspector, Human Rights Center (National Police Agency);
- H.E. Mr. KWON, Hae-ryong, Ambassador,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 Mr. LEE Ju-myeong, Minister-Counsellor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 Mr. KIM Gang Lip, Minister-Counsellor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 Mr. KWON, Soonchul, Counsellor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 Mr. LEE, Jae-wan, Counsellor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 Mr. KIM, Jong Cheol, Counsellor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 Ms. LEE, Jinsoo, First Secretary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 Mr. CHO, Ki-joung, First Secretary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 Interpreters: Ms. KIM Soyeong, Ms. WOO Joohyun and Ms. JEONG Eunji.

---



## 2. NHRI, UPR 후속조치과정 가이드라인 \_국문





##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UPR 후속과정 가이드라인

### 제14차 APF 회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제안

#### 목 차

- I. 가이드라인의 목적
- II. UPR 후속 과정의 정의
- III. UPR 후속 과정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A. UPR 결과 홍보 및 배포
  - B. UPR 권고 이행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 C. 국가의 UPR 결과 이행 모니터링
  - D.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UPR 직접이행
  - E.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 IV. 후속 조치에 있어 APF의 역할

#### 서론

1. 가장 최근 수립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인 UPR 메커니즘의 목적은 인권이사회 결의안 5/1에 잘 드러나 있다. 그 목적은 (a) 현장 인권상황의 개선, (b) 국가의 인권 의무 약속 이행과 국가가 당면한 과제와 긍정적 발전 평가, (c) 관련 국가의 협력과 합의를 거친, 국가의 역량 및 기술적 지원 향상, (d) 국가 및 이해관계자간의 모범 사례 공유, (e)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 협력 지원, (f) 인권이사회, 기타 인권 기구 및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의 전적인 협력 및 참여 장려 등을 포함한다.
2. UPR 결과 이행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가 지닌다. 이에 더해 국제 사회는 능력 강화 및 기술 보조를 통해 각 국의 UPR 결과라고도 알려진 국가 검토의 권고 및 결론 이행을 도와야 할 의무를 지닌다.
3. UPR 과정 내 국가인권기구 역할을 논의함에 있어, 국가가 UPR 결과 이행에 대한 우선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UPR의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 I. 가이드라인의 목적

4. 본 가이드 라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UPR 후속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에 일반적 정보를 제공한다.
- (b)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국내적, 지역적 차원에서 UPR 이행 및 후속조치 관련 활동을 제시한다.
- (c) UPR 후속조치의 일반적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간 UPR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건설적이며 상세한 논의 및 계획을 도모한다.
- (d) 정부, 시민사회, 유엔 기구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국가차원의 UPR 후속조치 이행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살펴본다.
- (e) 국가인권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UPR 과정 및 관련 결과에 대한 토론을 도모하며, 이를 국가 차원 이상으로 확장함으로써 아태지역 인권상황의 전반적 향상을 지원한다.

5. 본 가이드 라인은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가 UPR 후속 조치 과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통의 문제를 파악하며, 각 국 고유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추가적 UPR 후속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개발하기를 제안한다.

## II. UPR 후속 과정의 정의

6. UPR과정은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해당 국가의 국제 인권 규범 준수에 관한 정부, 유엔 및 기타 이해관계자(국가인권기구포함) 보고서 준비; 제네바 인권 이사회 실무그룹의 국가 성과 공개 검토; 인권 성과에 있어 국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결론 및 권고(이하 UPR 결과)의 채택. UPR 후속조치는 각 국가가 UPR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이다. 각 국가는 4년마다 심사를 받는다. 각 국가의 UPR 결과 이행 정도는 후속 검토를 통해 평가된다.

7. 국가인권기구는 UPR 결과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감시해야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인권기구는 교류와 대화를 도모하고 증진함으로써 여러 국가 이해 관계자간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UPR 과정의



주기성을 감안하여, UPR 국가 심사를 위해 제출된 국가인권기구 보고서는 UPR 결과 이행에만 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보고서는 지난 UPR 회기동안 제기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심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

8. 보고와 심사는 UPR 과정의 절반에 불과하다. UPR은 결과가 이행되고, 현실적 인권 상황의 가시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때 온전히 실행된다. 그러므로 UPR 후속조치 과정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UPR 결과 실현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Ⅲ. UPR 후속 과정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9.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의 UPR 결과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인권기구가 이러한 목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a) 국내, 지역, 국제적 UPR 홍보 및 배포
- b) UPR 결과 충족을 위한 국가인권기구별 구체적 전략 수립
- c) UPR 결과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실행 및 검토에 기여
- d) UPR 결과의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전략 실행
- e) UPR 후속 조치 과정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분야의 다른 관계 당사자들과의 협력

#### A. UPR 결과 홍보 및 배포

10. 국가인권기구는 UPR 결과에 대한 정책입안자, 법률제정자, 비정부 단체, 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적 청중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UPR이 새로운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인권기구는 UPR 및 국가적 지역적 인권 향상을 위한 UPR의 잠재력을 홍보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 a) UPR 보고서 및 결과 채택에 있어 국가인권기구는 정부에 문서의 번역을 장려할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 문서를 번역하여 배포할 수 있다. 문서를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만드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 문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쇄물, 인터넷 상 다운 가능한 파일, 이메일 첨부 등 다양한 형식으로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b) 국가인권기구는 UPR 결과에 대한 홍보/교육 자료를 만들어 UPR 과정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국가의 UPR 이행 의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UPR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적 변화를 증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 c) UPR 결과를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과 방송 등을 포함한 언론의 참여가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는 다양한 언론 전략을 고안해야 하며, 이에에는 언론보도, 연설, TV 및 라디오 토론, 뉴스 기사 및 칼럼 기고, 언론과의 합동 캠페인 등이 포함된다.
- d) 국가인권기구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UPR 결과를 정책입안자, 법률제정자, 사법부, NGO 단체 등에 전달 할 수 있다. UPR 권고가 관련 공공 정책 및 결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UPR 결과가 정책입안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인권 기구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더해, NGO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UPR 메커니즘에의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이 UPR 모든 과정에 있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 e) 국가인권기구는 UPR 결과 이행을 감시하고 연간 보고서에 진정상황을 보고 할 수 있다.
- f) 국가인권기구는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에 UPR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 g) 국가인권기구는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UPR 결과 이행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 B. UPR 권고 이행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11.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NAP)의 수립은 UPR 권고 이행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NAP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국가에서 국가인권기구는 UPR 후 속조치를 통해 NAP를 수립하라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UPR 결과 이행을 위한 전략 계획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포함한다.

- a) 국가인권기구는 감시를 시작하기 전 해당국가가 특정 기간 안에 UPR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는지를 알아야한다. 국가가 수립한 계획에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 혹은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NGO, 전문가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4년의 기간(UPR 회기를 반영)안에 운영되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정부에 제시해야한다.
- b) 국가에 의한 UPR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국가인권기구는 관련한 각종 인권 문제에 있어 감시 활동을 주류화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모든 부서가 UPR 감시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c) 국가인권기구는 다양한 권고를 검토하고 유엔 인권 조약 기구, 특별 절차의 보고와 권고 및 국가의 자발적인 약속 등을 참조하여 UPR 결과를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은 UPR 권고를 위한 별도의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 d) 국가 인권기구는 국가의 UPR 이행을 평가하는 연간, 중기 및/혹은 최종 보고서를 발간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다음 검토를 위한 이해관계자 보고서에 주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 형식과 구조는 UPR 결과 문서를 따라야한다. 국가인권기구는 UPR 이행과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국가로 하여금 UPR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위해 이러한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 e) 국가인권기구는 기존 정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UPR 결과를 적용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또한 지방공무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UPR 과정을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아래에서 위로'의 접근 방식은 중앙정부에 UPR 결과 이행을 보장하라는 긍정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

12. 마지막으로, UPR과 기타 유엔 인권 메커니즘 사이의 상호보완적이며 의존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국가 인권기구는 감시노력을 기울임에 있어, 조약 기구 및 특별 절차 보고를 UPR 결과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간주되어야 한다.

### C. 국가의 UPR 결과 이행 감시

13. 국가의 UPR 결과 이행 감시는 국가인권기구 후속 활동의 주된 부분을 이룬다. 결의안 5/1에 나와 있듯 후속 검토가 이전 검토의 결과에 대한 이행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고려하면, UPR 결과 이행의 평가는 국가의 다음 검토 준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14. 국가인권기구는 스스로, 혹은 NGO를 포함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UPR의 국가 이행을 감시할 수 있다. UPR 권고가 여러 범위의 인권 문제를 다루며, 다양한 범위의 전문성 및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동을 통한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이다. 이러한 경우, 국가인권기구를 포함한 참가 이해관계자들은 그들의 중심 분야 및 전문분야의 UPR 결론 이행 감시에 책임을 져야한다. 국가인권기구는 또한 UPR 결론 이행 감시과정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자의 기여를 주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D.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UPR 직접 이행

15. UPR 결과 이행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지만, 국가인권기구는 결과 이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 예로 인권 교육과 인식 제고를 들 수 있다. 인권 침해 피해자를 돕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직접 이행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UPR 보고 및/혹은 결과 문서에서 다른 특정 인권 침해의 피해자를 찾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구체적이며 예방적이어야 한다. 즉 침해에 대한 구제를 제공함과 동시에 입법적이며 정책적인 변화를 도모해야한다.

16. 그러나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량은 그들의 임무와 재정적 자원의 가용성에 달려있다. 이에 대해선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 E.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17. 결의안 5/1와 인권이사회 결정 6/102는 UPR 후속 조치 과정에 있어 기타 인권 이해관계자의 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 이해 관계자에는 국가인권기구, NGO, 학계, 노동조합, 언론, 지역 및 국제기구, 유엔 기구 및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가 포함된다.

##### a. NGO와의 협력

18. 국가인권기구는 UPR 모든 과정에 있어, NGO 및 다른 시민 사회관계자,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국가인권 기구 및 시민 사회 단체 간의 정기적 협력을 증진하는 협의 메커니즘이 존재해야하며, 특히, UPR 결과의 국내적인 협의 및 이행을 위해 국가차원의 메커니즘이 존재해야한다. 만일 이러한 메커니즘이 UPR 회기 보고 과정

에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기구는 UPR 결과 채택 이후 즉각적 메커니즘 수립을 위해 노력하길 권고한다.

19. 국가인권기구는 이행 전략 고안에 있어 UPR 결과의 합동 분석을 위해 관련 인권 관계자와의 토론을 주최하여야 한다.

20. 국가인권기구는 시민 사회와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감안하여 시민 사회와 여러 국가 기관(행정, 입법, 사법부 포함)간의 참여를 도모해야하며,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UPR 결과 이행을 위한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참여를 위한 협상 세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전략적 양자 회의
- 광범위한 관계자를 포함하는 특정주제(이행계획개발, 감시, 평가)에 대한 원탁회의
-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

21.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여러 단체 및 기관의 잠재성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UPR 결과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은 학계 및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토론, 이행 활동 홍보를 위한 전략적 언론 활용, 현장 경험이 있는 단체들과의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 **b. 지역 및 국제기구와 유엔 기구와의 협력**

22. 유엔 기구, 주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UPR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 단체의 UPR 과정에 대한 기여를 위한 역량 강화 노력을 주도해왔다. 이에 더해, 특정 계층(여성, 아동, 난민 등)에 대한 유엔기구의 전문성은 UPR 과정의 여러 측면에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국가 기구 및 지역 메커니즘 섹션(NIRMS)은 국가기구 UPR 모범사례 수집 및 전달, 교육 및 기타 역량 강화 활동 제공, 국가인권기구와 기타 유엔 기구 및 사무소 업무 주류화와 지역 및 국제적 차원(ICC)에서의 국가인권기구 간 공동 전략 도모 등에 있어 중심점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3. 이러한 이유로, 국가 인권기구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관련 유엔 기관과 국가적으로, 가능하다면 지역적 및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24. 국가인권기구는 지역 및 다자기구와 외국 정부를 포함한 기타 행위 주체와의 교류 및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다. 이에는 정부와의 협력과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UPR 결과 이행을 위한 전략개발 또는 정부에 UPR 권고 수용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외국 정부와 지역 및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IV. 후속 조치에 있어 APF의 역할

25. APF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UPR관련 국가인권기구의 행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a) 지역 내 외 국가인권기구의 UPR 후속 조치 모범 사례 수집 및
- b) 회원 및 기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인권기구가 UPR 후속조치 전략 및 이행에 활용할 가이드라인 및 참고 자료 개발
- c) 지역 내 국가인권기구 직원 및 위원에 UPR 후속 조치 관련 교육 및 훈련 제공을 위한 자원 마련
- d) 지역 내 국가인권기구 간 UPR 후속 조치를 위한 협력 증진 및 공동이슈에 대한 국가인권기구 이행 활동 개발 조정
- e) UPR 후속 조치에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 f) 국가인권기구와 기타 관련 국제 및 지역 인권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 **Guidelines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the UPR follow-up process**







# GUIDELINES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THE UPR FOLLOW-UP PROCESS

**Propos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o the 14th Annual Meeting of the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Table of Contents

- I. Purpose of this Guideline
- II. Definition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follow-up process
- III. The role of NHRIs in the UPR follow-up process
  - A Promoting and disseminating UPR outcomes
  - B. Strategic planning for implementing UPR outcomes
  - C. Monitoring Stat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 D.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 E. Cooperation with stakeholders
- IV. Role of the APF in the UPR follow-up process

## Introduction

1. The objectives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mechanism (UPR), the most recently established United Nations (UN) human rights mechanism, are set out i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They are:<sup>1)</sup> (a)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on the ground; (b) the fulfilment of the State's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and assessment of positive developments and challenges faced by the State; (c) the enhancement of the State's capacity and of technical assistance, in consultation with, and with the consent of, the State concerned; (d) the sharing of best practice among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e) support for cooperation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1) At paragraph 4 of the Annex to resolution 5/1.

rights; and (f) the encouragement of full cooperation and engagement with the Council, other human rights bodies and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 The obligation to implement UPR outcomes falls primarily on each State party.<sup>2)</sup> Fur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bears an obligation to aid States in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and conclusions emanating from country reviews (known as UPR outcomes) through the provision of capacity-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sup>3)</sup>

3. In discussing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 within the UPR process, it is imperative to keep in mind the objectives of the UPR as well as the fact that States bear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 I. PURPOSE OF THIS GUIDELINE

4. This guideline aims to:

- a) Provide general information to NHRIs on the UPR follow-up process by explaining what the UPR follow-up process is
- b) Propose UPR implementation and follow-up related activities for NHRIs at the local,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 c) Promote constructive and detailed discussion and planning in regard to UPR follow-up processes within and among NHRIs in the Asia-Pacific region by providing general examples of UPR follow-up
- d) Explore the role of NHRIs in implementing UPR follow-up at the national level in collaboration with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 civil society actors and UN agencies where relevant; and
- e) Assist in the overall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by promoting the discussion of the UPR process and its related outcomes

2) Refer paragraph 33 of resolution 5/1.

3) Refer paragraph 36 of resolution 5/1.

between NHRIs and other stakeholders, and thereby extending beyond the national level.

5. This guideline proposes that NHRIs in the Asia-Pacific region continue to discuss UPR follow-up processes and subsequently identify a set of common issues or refine and develop additional UPR follow-up guidelines that are applicable to each country's unique situation.

## II. DEFINITION OF THE UPR FOLLOW-UP PROCESS

6. The UPR process is composed of several stages, including: the preparation of governmental, UN and other stakeholder reports (including NHRIs) on the given State's compliance with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 public examination of the State's performance by a Working Grou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and the adoption of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henceforth UPR outcomes) that seek to assist the State in its human rights performance.<sup>4)</sup> UPR follow-up is the process by which each State implements its UPR outcomes. States are examined under the UPR every four years. A State's progress in implementing its UPR outcomes will be examined in subsequent reviews.

7. NHRIs should stimulate, support and monitor government efforts to fully implement UPR outcomes. In so doing, a NHRI should act as a bridge between and among various national stakeholders by promoting interaction and facilitating dialogue. Further, reflecting the cyclical nature of the UPR process, NHRI reports submitted towards UPR country examination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Such reports should also raise serious human rights issues that were either not raised or were inadequately addressed during the previous UPR cycle.

8. Reporting and examination is only the first half of the UPR process. The UPR is only realised in whole when outcomes are implemented and lead to a tangible improvement of

<sup>4)</sup> The State is given the opportunity to indicate which recommendations it does and does not accept.

the human rights situation on the ground. Therefore, in order for the UPR follow-up process to be successful, all stakeholders, including NHRIs, should exert the greatest of efforts towards the realisation of UPR outcomes.?

### III. THE ROLE OF NHRIs IN THE UPR FOLLOW-UP PROCESS

9. NHRIs have a crucial role to play in ensuring Stat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Steps that NHRIs might take towards this end include:

- a) Promoting and disseminating UPR outcomes domestically,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 b) Establishing concrete NHRI-specific strategies to meet UPR outcomes
- c)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review of State policies and programs that aims to realise UPR outcomes
- d) Executing strategies to ensure the direct, ful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and
- e) Collaborating with relevant stakeholders and other related parties at various stages of the UPR follow-up process.

#### **A. Promoting and disseminating UPR outcomes**

10. NHRI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making UPR outcomes accessible to a wide range of national audiences, including policy-makers, legislator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NGO) and the media. Given that the UPR is a new UN human rights mechanism, NHRIs should work to promote the UPR and its potential for 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improvement. NHRIs activities towards this end might include the following:

- a) Upon adoption of the UPR report and outcomes, NHRIs can encourage their governments to translate the document into the national language(s) or take it upon themselves to translate and disseminate it.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making the document available in disability-accessible formats. To ensure broad accessibility, it is advisable that UPR recommendations be provided in various formats

such as in hardcopy, as downloadable files on websites, as attachments to emails, and so on?

- b) NHRIs can develop promotional and education materials on the UPR outcomes to assist the public in understanding the UPR process and the implementation obligations on the State. Such materials can also promote legislative and policy changes relevant to each UPR recommendation, while explaining how such changes would bring positive changes to people's lives
- c) It is essential to involve the media (including the press and broadcast media) in order to effectively disseminate UPR outcomes to the public. NHRIs should develop a variety of media strategies, such as press releases, speeches, television and radio discussions, contributions to news articles and columns, and joint campaigns with the media
- d) NHRIs may consider presenting the UPR outcomes to policy-makers, legislators, the judiciary, and NGO activists through education programs.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UPR outcomes accessible to policy-makers so that the various recommendations are adequately reflected in relevant public policies and decisions. In addition to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NHRIs should consider providing NGOs and other stakeholders with training on effective engagement with the UPR mechanism so that they are able to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at all relevant stages of the UPR process
- e) NHRIs can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and report on developments in their public annual reports
- f) NHRIs can publish information on the UPR and outcomes on its website and newsletters
- g) NHRIs can assist Government in implementing UPR outcomes through conducting training and awareness-raising programs.

## **B.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plan for implementing UPR recommendations**

11. If a National Action Plan for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NAP) has been established in a given country, it can serve as a useful instrument for implementing UPR

recommendations. In countries where an NAP has yet to be formulated, a NHRI may take advantage of the UPR follow-up process to press that State to establish a NAP. Strategic plans for implementing UPR recommendations might include the following actions:

- a) Before beginning its monitoring efforts, NHRIs can determine whether the given State has formulated plans to implement UPR outcomes within a specific timeframe. States often establish plans that lack clear and measurable goals or specified a timeframe. NHRIs, in consultation with NGOs, expert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should develop a set of goals that operate on a four-year timeframe (mirroring the UPR cycle) and present these goals to the Government
- b) In order to effectively monitor UPR implementation by the State, NHRIs should mainstream their monitoring activities across the various human rights issues that they are working on, thereby enabling all units/departments within the NHRI to be involved in UPR monitoring on some level
- c) NHRIs may need to prioritise UPR outcomes by undertaking a review of the various recommendations and through reference to the reports and recommendations of the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the Special Procedures, and any voluntary commitments undertaken by the State. NHRIs may need to develop a separate strategy for those UPR recommendations that the State did not accept during its review
- d) NHRIs may produce annual, mid-term and/or final reports evaluating UPR implementation by the State. Such reports could constitute a major contribution towards stakeholders' report for the next review. The format and structure of these reports should conform to the UPR outcome document. NHRIs should also consider making these reports publicly available to attract attention to the UPR implementation process and to motivate the State to fully implement UPR outcomes
- e) NHRIs can apply UPR outcomes to existing Government programs/projects and seek to identify ways in which to improve them. NHRIs can also pursue th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by developing new programs with local officials; this "bottom-up" approach can place positive pressure on the national Government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12. Finally, in its monitoring efforts, given the complementary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UPR and other UN human rights mechanisms, NHRIs should consider treaty body and Special Procedures reports on the State as leverage to reinforce the State's obligation to implement UPR outcomes.

### C. Monitoring Stat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13.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by the State comprises a major part of NHRI follow-up activities. Given that subsequent reviews, as indicated in resolution 5/1, are intended to focus on the implementation of outcomes emanating from previous reviews,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is critical to preparation for the State's next review.

14. NHRIs may carry out the monitoring of State UPR implementation on their own or in cooperation with other stakeholders, such as NGOs. A collaborative approach may b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given that UPR recommendations cover a broad range human rights issues, thus requiring varied expertise and experience. In this case, participating stakeholders, including NHRIs themselves,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in their areas of chief focus and expertise. NHRIs could also assume a lead role in coordinating the contributions of various stakeholders to the UPR outcome monitoring process.

### D. Direct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by NHRIs

15. Although States bear the primary obligation to implement UPR outcomes, NHRIs can directly contribute to outcome implementation; one example being through the provis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Another form of direct implementation is through the provision of support to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NHRIs can work to identify and assist victims of violations of specific human rights addressed in the UPR report and/or outcome document. Such actions should be both remedial and preventative?

providing remedies for violations while at the same time promoting legislative and policy change.

16. The capacity of NHRIs to effect implementation, however, is very much dependent upon their mandates and the availability of financial resources. These issues warrant further consideration and discussion.

## E. Cooperation with stakeholders

17. Resolution 5/1 and Human Rights Council decision 6/102 envisage a clear role for other human rights stakeholders in the UPR follow-up process. Stakeholders include NHRIs, NGOs, academics, trade unions, the media,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 agencies and a broad range of civil society actors.

### a. Cooperation with NGOs

18. NHRIs should collaborate with NGOs and other relevant civil society actors and institutions at all stages of the UPR process. To this end, consultative mechanisms should be put in place which promote regular collaboration between NHRIs and civil society actors, particularly at the country level to ensure country-wide consultation and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If such mechanisms were not in place at the reporting phase of the UPR cycle,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NHRIs make every effort to establish one immediately after the adoption of UPR outcomes.

19. NHRIs should host discussions with relevant human rights actors to allow for joint analysis of UPR outcomes when formulating implementation strategies.

20. NHRIs, given their role as a bridge between civil society and the State, should also promote engagement between civil society and various State institutions (including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thereby establishing a dialogue that could lead to a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Modalities for such engagement could



include:

- \* Strategic bilateral meetings
- \* Roundtable discussions on specific and thematic issues (including the developm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that are inclusive of a broad range of actors; and
- \* Seminars and workshops which aim to raise awareness and build capacity.

21. Concrete methods aimed at harnessing the potential of various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possessing strategic expertise in various areas should be sought out. The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UPR outcomes can be informed through in-depth discussions with academics and professional groups; strategic use of the media in promoting implementation activities; and joint campaigns with organisations that have fieldwork experience.

## **b. Cooperation with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UN agencies**

22. UN agencies, chiefly the OHCHR, have taken a strong lead in promoting awareness of the UPR and in building the capacity of NHRIs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o contribute to the UPR process. Further, the expertise of UN agencies with regard to special and particular group of persons (for instance, women, children, refugees, and so on) will inform various aspects of the UPR process. Thirdly, the OHCHR's National Institutions and Regional Mechanisms Section (NIRMS) has great potential as a centralised focal point for: th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NHRI UPR best practice examples; the provision of training and other capacity-building activities; the mainstreaming of the work of NHRIs with other UN agencies and offices; and promoting common strategies amongst NHRIs at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ICC) levels.

23. For these reasons, NHRIs should seek close collaboration with OHCHR and relevant UN agencies, nationally, where possible or otherwise at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24. NHRIs can also strengthen their interaction and partnerships with other actors, including regional and multilateral organisations and foreign governments. This may include developing strategies to implement UPR outcomes in partnership with national Government,

and with the assistance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r seeking the support of foreign Governments and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 lobbying the national Government to accept UPR recommendations.

#### IV. ROLE OF THE APF IN THE UPR FOLLOW-UP PROCESS

25. The APF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NHRIs and facilitating the activities of NHRIs with regard to the UPR through:

- a) Collecting and disseminating best practice examples of UPR follow-up work from NHRIs within and outside the region
- b) Developing, through consultation with its membership and other sources of expertise, guidelines and other reference materials that NHRIs can use to design and implement UPR follow-up strategies
- c) Sourcing funding for the provis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on UPR follow-up to staff and commissioners of NHRIs in the region
- d) Facilitating cooperation on UPR follow-up processes between and amongst NHRIs in the region, and coordinating the development of NHRI implementation activities on common issues
- e) Developing policies to strengthen the role of NHRIs in the UPR follow-up process; and
- f) Assisting NHRIs in building networks with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stakeholders.

##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

2014년 11월 인쇄

2014년 11월 발행

발 행 인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전 화 (02) 2125-9966, Fax : (02) 2125-0919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인 쇄 **세일포커스(주)**  
Tel : (02) 2275-6894-6, Fax : (02) 2263-5593

I S B N 978-89-6114-374-5 93360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555-01